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조한범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인 쇄 2004년 12월

발 행 2004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연구실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5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 격 4,500원

© 통일연구원, 2004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무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사도서목록(CIP)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조한범. — 서울
: 통일연구원, 2004

p. : cm. — (연구총서 ; 04-16)

참고문헌수록

ISBN 89-8479-259-4 93340

340.911-KDC4

320.9519-DDC21

CIP2004002239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서론	1
II. 통일문제의 복잡성과 국민적 합의기반	5
1. 통일문제의 복잡성	5
2.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전환과 국민적 합의기반	9
III. 보혁 갈등구조의 기초: 분단과 냉전문화의 형성	15
1. 분단체제의 근대화	15
2. 친미·반공문화와 반문화	19
3. 최근의 남남갈등 추이	26
IV.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33
1. 남북 사회문화공동체의 재인식	33
2. ‘성찰적 통일’ 인식의 확산	47
3. 냉전문화의 해체	56
4. 합의구조의 형성	64
5. 시민사회교육의 확대	69
6. 탈 냉전형 통일교육지원체제의 구축	76
V. 결론	79

참고문헌85

최근 발간자료 안내89

표 목 차

<표 IV-1> 공동체 형성 단계 38

서론

I

분단체제하에서 통일은 남한과 북한을 막론하고 지상과제였다. 이와 같은 점에서 남북관계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는 대북화해협력정책, 그리고 이를 계승한 평화변영정책의 추진은 중요하고도 의미있는 계기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후에 추진된 남북교류의 활성화 과정은 남북관계의 발전과 아울러 동시에 남한사회내의 갈등의 골을 깊게 했다. 남북정상회담이 결국 특검의 대상이 되는 운명에 직면한 것은 오늘날 남북관계 및 통일의 현실적 지표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동해에서는 관광유람선이 남북을 오가고, 서해에서는 남북 해군간에 교전이 벌어지는 상황”은 참여정부에 들어서도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대북화해협력정책을 계승한 참여정부의 평화변영정책추진구도 하에서 남북경협의 실질적 성과로 개성공단사업이 구체적 결실을 맺고 있으며, ‘남한에서 북한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문제의 핵심적 열쇠를 상징하는 북핵문제는 6자회담의 개최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부시대통령의 재선으로 미국내 네오콘의 강경한 대북정책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개성공단사업’과 ‘네오콘’은 오늘의 남북관계의 현실을 상징하는 양면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남한사회내부의 보혁진영은 통일문제와 이와 관련된 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갈등구조를 형성하면서 진영간의 대립을 심화시키고 있다. 정치권 역시 통일·민족문제에 대한 합의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고, 민족문제를 정쟁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통일문제가 그 만큼 다면적·다층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동시에 복합적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직접적인 남북양자관계의 발전은 남북한간의 교류 확대와 평화 정착이라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두 얼굴을 지니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의 현실적 수단인 남북교류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양과 질에서 현저한 진전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남북한간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상징적인 사업들이 성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의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두 측면간의 불균형에 기인한다.

분단은 남북한 사회의 발전에 근본적 제약요인이었으며, 남북문제는 곧바로 남북한내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히 남북한 사회내부의 국내정치적 차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남한사회의 경우 민족문제가 여야에 의해서 정략적으로 활용되어온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남북관계를 둘러싼 이슈들은 정쟁의 대상으로 활용되어 민족문제라는 본질이 외면당하는 현실이 종종 발생했으며, 남한사회내부의 냉전문화는 남북관계 진전과 대북정책의 추진력을 약화시키는 근본적 요인이었다. 이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병행하여 남한사회내부의 보혁 갈등도 정비례해서 확대되어온 현실의 숨은 이유가

다. 통일문제를 둘러싼 남한사회의 보혁 갈등은 이미 방치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통일문제 뿐만 아니라 연관된 다른 이슈들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은 그동안 통일문제를 남북양자간의 문제로 받아들였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통일문제의 대내적 측면에 대한 본격적 인식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 정부는 남북화해의 시도라는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정부는 대북정책을 보다 확대된 국가발전전략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은 보혁 갈등구조 속에서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여야의 협력구도정착과 국민적 합의, 그리고 냉전문화해소에 대한 전 사회적인 성찰적 노력에 의해서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다.

냉전체제의 해체와 더불어 시작된 대북화해협력정책과 이를 계승한 평화번영정책은 대립구조에서 벗어나 화해구조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전환으로 평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화해협력구조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대북정책의 추진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남남갈등, 통일기반 확충, 국제사회의 유기적 협력 구도 설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내부적 장애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전환으로 남북관계 진전의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됨과 아울러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마련과 통일과정을 효율적으로 수렴해 낼 남한사회내부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는 민족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남북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내적기반 조성도 보다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양자적 관점의 노력과 더불어 대내적 통일 역량의 강화가 필요한바, 남한사회내부의 다양한 장애요인들을 제거하는 동시에, 남북관계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내부역량의 강화에 주력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에 부응하고 궁극적인 남북통합에 대비하는 대내적 인프라구축 방안의 모색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분단의 영향 및 대내적 갈등구조를 분석하고 사회문화공동체의 재해석에 기초, 분단이 한국사회에 가져온 비정상적 결과물들을 해소하는 방안을 대내적 기반구축방안의 차원에서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통일문제의 복잡성과 국민적 합의기반

1. 통일문제의 복잡성

세계적인 냉전체제의 해체와 지구화과정은 분단한국을 둘러싼 시대적 조류이자,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시대적 조류에 편승해야하는 일반성과 동시에 분단이라는 한반도적 상황의 특수성이 중첩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냉전체제하의 지구화’(globalization under Cold War)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한반도가 민족분단과 지역적 안보 딜레마라는 한계를 지닌 상태에서 지구화과정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¹ 한반도는 사회주의체제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아직 분단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냉전의 고도로 남아있다. 냉전체제하에서 남북한의 구성원 모두는 안보위기를 생활의 일부로 인식하고 살아왔으며, 군사적 적대관계의 고저는 일상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왔다.² 북핵문제는 한반도의 불안정한 평화와 안보위기를 함축하고 있

¹ 조한범·김성철 외, 『비정부기구를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0), p. 6.

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분단으로 인한 남북 갈등구조는 다시 남북한 사회내부의 냉전문화로 재생산되어 일상생활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세계적 냉전의 해체와 한반도 안보위기의 상존이라는 모순적 조건에서 시작된 대북화해협력정책과 이를 계승한 평화변영정책으로 남북관계는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간의 인적교류의 확대, 상징적 민족공동행사의 성사, 금강산 육로관광의 시작, 그리고 개성공단 사업 등 양과 질에 있어서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의미 있는 남북교류협력이 확대되어 왔다. 남북양자관계와 아울러 국제적 차원에서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개입 양상이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차원이외에 민간 국제지원단체들이 대북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중국의 북한접경 지역에서는 남한뿐만 아니라 국제적 인도지원단체들이 탈북자에 대한 지원에 개입하고 있다. 탈북자 지원은 중국 실정법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북한인권법 통과는 탈북자문제를 포함한 북한인권 이슈 전체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의 전개는 분단상태의 한반도를 둘러싼 지구화의 복잡성을 반영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두 체제 정치지도자간 공식적 만남으로 상징되는 당국간 남북교류, 기업과 민간단체의 남북교류, 국제기구와 주변국의 개입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갈등적 또는 협력적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는 국가차원에

² 예를 들어 북한 장사정포의 사거리와 분당 발사속도 등 전문적 군사사안조차 군사적 의미를 넘어 서울주민들의 일상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이슈의 제기자체는 일반주민의 직접적 관심의 대상이며, 커다란 사회적 파급효과를 주게 된다.

서 뿐만 아니라 국가와 비국가(non-state) 행위자들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고, 안보 이슈는 경제 및 인도주의 이슈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는 ‘한국 문제의 복잡성’(complexity of Korean problem)을 의미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³

첫째, 한국문제에 관여하는 비국가 행위자들은 매우 다양해져서 남북한 국가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주변국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말하자면, 한국문제와 관련한 많은 행위자들은 국가차원의 통제를 이미 넘어서 있다.

둘째, 한국문제는 남북한 국가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남한의 민간기업 및 시민단체들과 북한의 국가사이에서의 상호작용으로도 나타난다. 이들은 한반도 경계를 넘어서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영토로까지 확장되어 나타나고 있다.

셋째, 한국문제의 이슈들은 복잡적이며, 상호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이슈들은 한반도의 안보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과 인적교류를 포함하며, 긴장을 증대시키거나 완화시키는 밀접한 상호작용을 벌이고 있다.

이와 같은 한반도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했을 때, 한반도에서의 지구화는 일반적 의미의 지구화 속성을 지니는 한편, 분단에 의한 냉전의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기인하는 한국 특유의 복잡적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문제는 국가뿐만 아니라 비국가 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보 이슈로부터 인도주의적 이슈까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통일문제 역시 좁은 의미로는 남북한관계, 넓은 의미로는 동북아문제로서 다양한 행위주체와 이슈들이 중층적으로 그리고 복잡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³ 위의 책, pp. 7-8.

남북당국간 합의는 다른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순수한 민간교류는 당국간의 관계를 경색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안보적 이슈뿐만 아니라 인권문제도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외부세계의 개입 대상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남한 사회의 민주화와 정치지형의 변화는 남한사회내부의 이념적 스펙트럼과 행위주체의 다양화를 초래했다. 따라서 남북관계에 있어 국가가 배타적 자율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던 과거와 본질적으로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국가가 통일·대북정책의 추진에 있어 배타적 우위성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으며, 시민사회의 합의와 동의 없이 대북·통일 정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한반도 문제는 국가뿐만 아니라 비국가 관계로 구성되어 있고 안보 이슈로부터 인도주의적 이슈까지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 평화상태의 유지와 통일을 지향하는 노력은 행위자 측면에서나 이슈들 측면에서나 어려운 작업일 수밖에 없다. 특히 이슈들 사이의 상호연관성과 중첩성이 강해서 한 이슈의 해결은 다른 이슈의 해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순수한 인도적 대북지원이라는 이슈는 인도적 문제만이 아니라 남한내 보혁간의 상반된 반응, 군사식량전용가능성, 미국의 대북 정책과의 공조, 북한 내 인권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과 중첩된다. 행위자차원 역시 동일한 맥락을 지니고 있다.

2.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전환과 국민적 합의기반

1980년대 말 지구적 차원의 냉전체제가 해체됨으로써 남북관계 역시 근본적 성격변화의 요구에 직면했으며, 북한의 만성적 위기구조의 심화로 남북경쟁 역시 그 의미를 상실했다. 남북관계는 ‘동등한 대립관계’에서 ‘북한의 문제에 대해 남한이 지원해야 하는 관계’로 근본적인 성격변화의 과정을 겪었다. 이는 냉전체제의 대립을 토대로 만들어진 대북정책의 근본적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었으며, 새로운 대북정책 패러다임 정립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구체화된 국민의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과 이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평화변영정책은 상황적 조건의 변화를 반영한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전환으로 평가될 수 있다.

대북화해협력정책은 남북한간 화해와 협력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북화해협력정책의 목표는 당장 가능하지 않은 통일을 유보하고, 대신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한 현실적 수단으로써 전방위에 걸친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했다. 대북화해협력정책은 장기간 지속된 남북한간의 소모적 대립구조에서 대화가 가능한 상태로 남북관계의 구도를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적합한 방향성을 견지 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대북화해협력정책의 기초를 계승하여 발전시키고 있는 평화변영정책⁴은 한반도 평화의 증진과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

⁴ 평화변영정책은 “기존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심화·발전을 담은 한 단계 진전된 정책”의 필요성에서 출발한 것으로 “기존의 대북화해협력정책(포용정책, 햇볕정책)을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보완·발전시킨 대안”으로 제시

일의 기반조성과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를 지향하는 참여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변영정책은 주변국가와 협력하여 당면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의 실질협력을 증진하는 동시에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지향한다. 그리고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를 지원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나아가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하여 평화통일의 실질적 기반을 조성함과 아울러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전략적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변영정책의 달성목표는 ‘한반도 평화증진과 공동번영추구’이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상호신뢰우선과 호혜주의, 남북당사자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⁵ 따라서 평화변영정책은 냉전체제 해체 이후 진행되어온 변화의 흐름을 담아내는 동시에 대북정책을 국가발전전략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측면에서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비해 진일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북화해협력정책과 평화변영정책에 대한 이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통일문제의 복잡성에서 기인한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효과적으로 경주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간 지속된 한반도 냉전구조는 복잡성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냉전구조의 해체는 종합적이고도 복합적인 과정을 경유하게 되는바, 대내외적으로 많은 진통을 수반하게 된다. 이는 동서독의 관계개선과정과 통일의 경험에

되고 있다. 통일부, 『평화변영정책해설자료』 (서울: 통일부, 2004). p. 5.

⁵ 위의 책, pp. 6-10.

서 이미 나타난 바 있다.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전환은 정당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지향하는 기본방향 위에서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을 필요로 했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과 주변국, 특히 미국과 원활한 협력관계의 설정 등의 분야는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전환과정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개성공단사업 등 남북교류가 진전되는 가운데 남북군사당국자회담분야의 부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해에서의 남북해군간 긴장상태는 지속되고 있으며, 북핵문제로 대표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의 해소는 아직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주변국과의 정책 공조문제에 있어서도 매끄럽지 못한 면들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전환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일방적 미국주도구도의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변화의 영향에 대한 분석과 미국의 반응에 대응할 시나리오들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했다. 현실적으로 한·미 공조에 기반 한 안보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변국, 특히 미국과의 협력관계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한·미 정책 공조의 과정에서 우리 측은 일방적 기대와 해석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미국의 반응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행보를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부시 행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노선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간 대북인식 및 구체적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조율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느냐에 대해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정에서 부각된 보다 중요한 문제는 통일문제를 둘러싼 남한사회내부의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남남갈등문제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구축과 직접적 연관을 맺고 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남북한에 공히 존재하는

냉전문화는 대북정책 추진에 근본적 제약요인인바,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 위에서 정책이 진행될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국민적 합의기반 구축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으며, 이를 통한 대북정책 추진이 필요했었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한반도의 냉전구조와 냉전문화가 공고하게 존재하는 구도 속에서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전환이라는 새로운 변화는 다양한 마찰음들을 낼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변화에 대해 보수층은 진보세력과 다른 태도를 나타내며, 따라서 통일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합의구조가 형성될 때 까지 보혁간의 입장 차이가 부각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보혁간의 차이가 배타적인 이분법적 구도가 아닌 대화를 통한 합의가 가능한 공존구조로 유도될 수 있느냐에 놓여있다. 보수진영은 민족문제에 대한 이념적 공세로 정책적 효율성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소홀했으며, 새로운 대북정책의 추진세력은 정책의 기본방향성이 옳다는 전제 속에서 보수진영의 비판을 화합적 차원에서 포용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남한사회는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의 이분법적 대립구도의 형성을 차단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여야간의 비타협적 대립구조에 기인한바 크다고 할 수 있다. 여야간의 비타협적 구도 속에서 민족문제인 남북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었으며, 보수적 야당은 남북문제에 대한 공세적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민족문제가 초당적 협의의 틀 속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따라서 국내정치적 구도상의 문제가 효율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가운데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대내적 인프라의 구축이 병행되는 양상보다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적, 비타협적 구도로 한국사회

가 재편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남북관계변화를 둘러싼 남남갈등의 부각은 결과적으로 민족문제의 정쟁화를 의미했으며, 이는 소수정권의 한계를 지닌 집권세력의 대북정책 추진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야당의 협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끊임 없이 제기되는 비판여론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말았다.

정부는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의 남남갈등에 대한 예측과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소수의 정책결정자에 지나치게 의지하고 남북관계의 대형 이벤트를 통한 국면전환이라는 카드에 집착한 반면에 국민적 합의기반구축에 상대적으로 소홀,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한계를 노정했다. 대북정책에 수반되는 ‘비용’에 비해 남북관계 개선 및 북한의 변화라는 ‘효과’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문제도 이와 관련이 있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목표는 본질적으로 북한체제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안정된 기반 위에서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적 합의구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정부는 대북정책 추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일방적 해석에 입각한 정책 추진을 시도했으며, 따라서 북한에 대한 평가에 있어 균형감각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데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대북정책 추진에 필요한 합의구조의 형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진행된 남북관계 변화는 남남갈등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켰다. 남한사회가 대북정책 추진에 필요한 합의기반 구축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은 냉전체제에서 잠재해 있던 남한사회 내에 통일과 북한문제를 둘러싼 상이한 입장의 보수와 진보 두 진영, 즉 보혁구조가 현재적 대립구도로 전면화 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보수와 진보

두 진영은 대북정책 추진 및 남북관계 변화의 주요한 계기마다 남남갈등을 보여 왔으며, 이는 다시 대북정책 추진력을 약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해왔다. 남남갈등은 북한·통일문제와 관련된 주변이슈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 예를 들어 한·미관계의 성격변화, 이라크 파병, 그리고 보안법폐지 논란 등이 그것이라 할 수 있다. 남한사회내의 통일문제를 둘러싼 배타적 갈등구조의 현재화는 분단과 이로부터 기인한 뿌리 깊은 냉전문화가 한국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구조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의미하는 동시에 국민적 합의기반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보험 갈등구조의 기초: 분단과 냉전문화의 형성

1. 분단체제의 근대화

일제강점기의 종식과 동시에 한반도의 분단이 시작됨에 따라 남북한체제의 건설과 발전은 분단이라는 태생적 한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따라서 분단으로 인한 대립구조의 형성과 그 영향은 남북한체제의 정체성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분단은 남북한간의 적대적 공존관계를 형성함과 아울러 남북한 사회내부의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쳤다.

남북한의 근대화와 발전은 분단이라는 지배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다. 남한에서는 자본주의적 방식의 근대화가, 그리고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적 방식이라는 각각 본질을 달리하는 근대화가 시도되어 왔다. 분단으로 인한 냉전체제의 형성은 국제정치적 차원에서 한반도가 외적인 영향력에 의해 자유롭지 못했음을 의미했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 사회내부의 국내정치적 차원에서도 분단의 제약성이 재생산되어 남북한 사회의 발전과 근대화과정에 영향을 미쳐왔다.

분단체제하 남북한에서 시도된 각기 다른 방식의 근대화의 시도와 경쟁은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방식의 실패로 귀착되었다. 그 결과 북한은 체제의 생명력을 상실한 위기구조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한강의 기적이라는 평가와 아울러 남한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구축했다. 남북한의 근대화는 분단이라는 ‘비정상적’상태의 근본적 한계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공통성을 지닌다. 따라서 남한의 성공한 근대화 역시 분단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에서 ‘근대화의 정상적 경로’를 걸어 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발전논리를 앞세운 권위주의정권하에서의 압축적 성장은 남한사회의 정치적 자율성을 약화시켰고, 시민사회의 발전을 저해했다. 압축적 고도성장 전략에 따른 경제적 성과주의와 아울러 반공주의라는 냉전적 요인은 오랫동안 남한의 권위주의정권을 보호하는 외피로 기능했다.

분단과 동시에 탄생한 반공주의와 발전논리는 남한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적 기둥이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반대는 체제자체에 대한 반대와 동일시되었다. 세계적 냉전체제의 최전선에서 자본주의체제의 보루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남한 사회에서의 반공주의는 미국을 선두로 하는 서방세계로부터의 후원을 의미하는 ‘보증수표’로서 핵심적 체제유지의 원리로 취급되었다. 남한사회 내에 온존되어 있는 냉전문화는 이와 같은 점에서 국내외적인 중층적 구조를 지니고 온존되어 왔으며,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재생산되었다. 그리고 세계적 냉전체제가 소멸된 현 시점에서도 분단상태의 한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단으로 인한 상이한 방식의 근대화는 남과 북에 있어서 이질적인 체제와 제도의 형성을 의미했다. 남북한간의 이질화는 남과 북의 사회구성원들이 상이한 사회문화적 삶을 영위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통

일은 정치, 경제 등 제도적인 차원의 통합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분단 체제상에서 나타난 이질화의 영향은 일상생활 속에서 재생산되는 구조를 장기간 유지했다는 점에서 제도적인 차원의 통합만으로 해소되지 않으며, 장기간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남북한의 사회성원들이 상이한 생활세계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재사회화로는 해소되기 어려운 신념체계와 행동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⁶

남북한의 이질화는 사회주의체제와 자본주의체제가 근본적으로 다른 근대화과정을 거쳐 왔다는 점에 기인한다. 근대는 인간이 신으로부터 해방되어 주체적으로 세속의 영역을 개척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인간이 신의 가치에서 해방되어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되었을 때, 신의 가치를 대체하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했다. 그것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간적 가치였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인간적 가치는 조화로운 합일이 아닌, 각자 한편으로 경도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와 같은 점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근대화 여정이 둘로 나뉘어져 진행되어 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는 자유를, 사회주의는 평등을 자신들의 근대화 여정에 있어 핵심적 가치로 설정했다. 그리고 두 체제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간의 조화보다는 자신들이 선택한 반쪽의 가치를 강화하는 데 주력해 왔다. 두 체제간의 냉전적 대립은 선택을 정당화시키는 외적인 기제이자, 동시에 스스로의 선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족쇄로 작용해 왔다.

현실 사회주의는 이미 체제로서 생명력을 다했다는 점에서 자신들이 선택한 근대화를 완성시키는 데 실패했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실패가 자본주의적 근대화가 정당화될 수 있는 논리의 필요충분조건으

⁶ 조한범, “남북한 사회문화통합을 위한 제언,” 『통일과 사회·문화통합』, 훔볼트 대학 Hans Meyer 총장 초청 국제심포지엄 발표논문 (2003.9.18), pp. 23-25.

로써의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포스트모더니즘과 달리 ‘근대화의 기획’을 완성할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근대의 의미를 인정하는 진영에서도 ‘성찰적 근대화’(reflexive Modernisierung)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자본주의적 근대화 역시 ‘절반의 성공’일 수밖에 없다. 이점에서 현실 사회주의체제가 역사적 운명을 다한 21세기는 신으로부터 해방되어 인간이 스스로 발견한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가치의 조화로운 합일을 통한 근대화의 완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냉전체제의 최전선에 대치한 남북한은 상이한 체제를 건설해왔으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두 체제의 이념적 대립은 남북한 사회의 내부에서 극단적 배타성을 지닌 채 재생산되었다. 이점에서 남북한의 근대화과정은 바로 분단체제의 재생산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남북한은 각자 내부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가치체계를 극단적이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발전시켜왔다. 상대방은 적대시되었으며, 이 같은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가치에 대한 그 어떠한 이해나 동조도 이적행위와 동일시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남북한의 근대화는 분단과 극단적 대립으로 인해 기형적으로 진행되어왔다. 북한은 자신들의 전체주의적 속성을 평등주의로 포장해왔고, 남한에서는 발전논리 속에서 자본은 자유를 만끽해왔다. 그 결과로 우리는 체제의 생명력을 상실하고 있는 북한과, 반공과 성장지상주의속에서 상실했던 가치의 회복과 시민사회의 정상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남한의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상이한 테마를 주제로 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근대화는 결과적으로 상이한 ‘근대인’을 탄생시키게 되는 태생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의 이질화는 단순한 상호대립적인 폐쇄적 분단구조를 뛰어넘어 보다 본질적인 근대화의 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이질화해소의 문제는 단절된 교류와 접촉의 재개라는 단기적 수단을 넘어 분단으로 인해 이질적으로 진행된 근대화간의 통합과 이를 통한 근대화의 정상성 회복이라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것이다.

2. 친미·반공문화와 반문화

분단체제의 등장과 한반도 냉전구조의 형성은 동북아의 외교안보적 질서재편과정에서 탄생한 것이지만 동시에 남북한의 내부의 가치체계의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분단은 식민지배체제에서 벗어난 신생 국가로서 새로운 체제를 형성해야 하는 남북한사회가 태생적 한계를 지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한반도 냉전구조는 다양한 차원에서 남북한의 내부구조에서 재생산 되었으며, 냉전문화는 냉전구조의 내적인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와 평화정착은 세계적 냉전체제의 해체 이후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의 역내 질서재편과 연관된 국제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남북한 사회의 대내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한반도 냉전구조는 남북한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세계적 차원의 양대 대립진영으로 각각 재편되는 것을 의미했다. 분단과 아울러 남한에는 북한 및 사회주의권과의 대립구조인 ‘혈맹’으로서의 한·미 동맹체제가 탄생했으며, 남한사회 내에는 일방적 친미주의와 반공문화가 정착되었다. 친미주의와 반공문화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강력한 반북주의와 같은 맥락을 지니게 되었다. 세계적인 차원의 냉전구조가 심화됨에 따라 한·미동맹관계의 결속력은 강화되었고, 반공문화

역시 강력한 내적 통제기제로써 영향력을 발휘했다. 한국전쟁을 통해 형성된 북한에 대한 극단적 적개심의 형성은 친구로서 ‘미국’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동시에 ‘적’으로서 북한의 의미를 강조하는 강화기제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냉전체제하에서 ‘친미, 반공’은 남한사회의 핵심적 가치로 자리 잡았다.

반공주의를 핵심 축으로 하는 냉전문화는 남한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재생산되어왔다.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인 성향의 정당의 탄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권위주의적 정권은 ‘정당성의 결여’라는 스스로의 약점을 압축적 성장을 통한 ‘효율성’으로 대체하려 했으며, ‘친미, 반공’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냉전문화를 효율적인 통제기제로 활용했다. 남한사회에서는 그 어느 경우에도 ‘친미, 반공’에 대한 도전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으며, 금기의 영역에 속했다. 이는 종종 정치적 반대 세력 및 저항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활용되어왔다. 극히 최근 까지도 정당이나 대중적 지지를 받는 정치지도자에 대한 이념적 성향의 문제를 제기하는 소위 ‘색깔론’은 그 자체만으로도 선거에서 정당 및 정치지도자에 대해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소재로 활용되어왔다. 친미주의와 반공문화가 남한사회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함에 따라 남한사회내부에는 기본적으로 보수적 성향의 정당구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최근 까지도 한국의 정당구조는 보수적인 성향의 정당들이 이념적으로는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상태에서 여야구도를 형성했으며, 정당간 차이는 정책적 차이이기보다 주로 상징적인 정치적 지도자와 지역적 편향성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반공주의는 정권의 취약한 정당성을 보충해줄 효과적인 기제로써 다양한 차원에서 활용되었다. 반공주의는 종종 정치적 반대와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시민사회의 영역에서도 다원주의와 민주주의에 대

한 요구를 억제하는 효과적인 기제로써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운동이나 민중문화는 사회발전에 따른 다원성의 추구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체제저항적인 이념행위로 취급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남한사회의 공안기구들은 ‘포괄적 범위’를 지니는 반공주의 위반행위의 단속과 처벌을 위해 상당한 자원과 인력을 할당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상황적 제약성은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남한의 적화를 공언한 북한의 존재에 의해 남한사회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종종 정권안보의 수호를 위해 이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간의 대립과 관련된 외교안보적 상황의 전개는 한·미동맹관계를 강화시켜왔으며, 이는 친미주의적 정서 및 문화를 남한사회에 확산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한국전쟁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린 미국’이라는 일방적 친미정서를 낳았으며,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과 냉전체제의 지속은 한·미동맹을 ‘공산세력에 맞서 남한을 지켜주는 미국’이라는 정서 속에서 이해하게 만들었다. 냉전체제하 한반도에서 전쟁의 상시적 위협은 남한사회가 한·미동맹을 생존적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근본적 조건이었다. 따라서 한·미동맹관계와 친미주의적 정서에 반하는 행위들은 금기시 되었으며, 때때로 친북주의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동시에 일방적 친미주의는 그에 대한 반문화의 형성을 의미했다. 따라서 친미주의의 형성과정은 동시에 반미주의를 형성시키는 과정이기도 했다. 정당성의 결여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 권위주의 정부가 한·미동맹관계와 친미주의를 정권안보에 활용함으로써 반미주의는 남한의 민주화운동세력들에 있어서 주요한 운동이슈로 자리 잡았다. 특히 광주민중화운동의 진압과정에 있어 미국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으로써 신군부와 미국은 민주화운동 세력의 동일한 비판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미 동맹과 권위주의정부체제하에서 ‘반미주의’적 인식은 공개적으로 언급되기 어려웠으며, 따라서 은밀한 반문화와 저항문화의 형태로 형성, 발전되는 경로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친미주의와 반미주의를 지향하는 세력간의 평화적 대화와 인식의 교류는 원천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은 반미주의가 극적이고 저항적 방식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 요인이었다. 1980년대 초의 미 문화원방화 사건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광주민주화운동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는 그동안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던 ‘친구로서의 미국’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재해석의 요구였다.

친미주의와 반공문화는 냉전체제의 해체와 남한사회의 민주화 및 시민사회의 성장, 그리고 화해를 지향하는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인해 새로운 변화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개선과정은 ‘적으로서의 북한’이라는 단순한 이미지에 복합적인 의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적인 냉전체제의 해체 이후 동서진영간의 대립은 의미를 상실했으며, 국제관계는 이념이 아니라 실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한반도 역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한·미관계 역시 이념적 동질성에 기반 한 과거의 동맹관계에서부터 새로운 변화를 수용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변화와 부시정부의 대북압박정책기조 속에서 발생한 여중생사망사건 등 일련의 과정은 남한사회의 대미인식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부시정부의 대북강경책과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목도한 국제문제에 대한 미국의 일방주의와 군사적

해법은 한반도문제에 대한 미국의 해법이 군사적 방식일수도 있음을 남북한 모두에 깨닫게 해주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 전개된 남북관계의 발전은 ‘친구로서의 미국’과 ‘적으로서의 북한’이라는 일방적 도식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⁷ 따라서 남한에서는 미국에 비해 북한정권의 위협성을 낮게 보고 있는 반면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반감은 높아지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⁸ 이는 친미주의와 반공문화가 일방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냉전체제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것이었다.

기아상황에 이른 북한의 위기구조는 전쟁의 위협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더 이상 체제경쟁대상이 아니며, ‘관리’의 대상으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 체제경쟁이 의미를 상실한 상황에서 대북정책 역시 남북한 간의 평화적 공존을 지향해야 하는

⁷ 1993년에 한국갤럽이 ‘향후 한국의 안보에 군사적으로 위협이 될 나라’를 조사한 결과에서 북한(44%), 일본(15%), 중국(4%)에 이어 미국은 1%에 불과했다. 당시엔 주한·미군이 한국 안보에 ‘중요하다’는 의견도 대다수인 72%였다. 그러나 2003년 9월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미국의 부시 대통령 중에 누가 더 우리나라의 평화에 위협적인가”라는 물음에 부시 대통령(38%)이란 응답이 김정일 위원장(42%)이란 응답과 유사하게 나와 대미인식이 악화되었음을 나타냈다. 2004년 1월 리서치앤리서치의 전화조사에서 “우리나라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어디인가”란 질문에 미국(39%)이란 응답이 북한(33%)보다 더 많게 나와 최근 미국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추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일보』, 2004년 1월 12일.

⁸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한국과 미국 등 20개국을 대상으로 한 2003년 조사에서 북한정권이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위험한 대상’이란 응답이 호주(79%)에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미국(77%), 독일(77%), 영국(71%), 캐나다(70%) 등의 순이었고, 한국은 69%로 여섯 번째에 머물렀다. 반면 남한의 경우 응답자 중 76%가 ‘미국이 대외정책을 결정할 때 한국민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으며,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에 대해서도 반대가 71%에 달했다. 평화 유지에 잠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에 대해 미국이 선제공격을 가하는 것도 한국인의 절반 이상(55%)이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는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인과 미국인 사이에 북한문제에 대한 인식차와 아울러 남한사회의 친미성향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조선일보』, 2003년 8월 31일.

바, 새로운 대북정책의 추진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타난 당연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도래는 한반도 냉전구조의 내적인 표현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남한사회의 냉전문화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적인 냉전구조의 해체와 남북관계의 변화는 냉전적 패러다임 속에서 안주했던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의 구축과 적응을 요구하고 있으며, 변화는 이미 우리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변화는 이에 맞는 새로운 질서의 형성을 요구하며, 이는 관성을 지닌 과거의 질서와 충돌하는 경향을 보인다.

냉전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립을 일상화하고, 사회를 양극화시켰다는 점이다. 냉전문화는 문화적 다원성과 이념적 포용성의 발달을 극도로 억제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갈등구조에 중첩되어 투영되어 왔다. 이는 이념과 가치에 대한 이분법적 대립구조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대화와 타협보다는 배제와 거부가 일반문화로 사회 내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북정책, 한·미관계, 이라크파병, 그리로 보안법철폐 등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여론의 양극화와 보혁 간의 극단적 의견대립은 냉전문화의 영향에 의한 구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⁹ 냉전문화는 북한과 미국에 대한 현실적 인식의 형성을 저해해온 것이다.

일방적 친미와 반미는 한국 현대사의 결과인 동시에 양자 모두 일정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현실적 조건으로 하는 친미주의는 세계적인 냉전체제의 형성과 전개과정에서 남한에게 생존

⁹ 2003년 8월 MBC 조사의 경우 국내 보수-진보 진영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79.1%가 '심각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편가름과 갈등을 조장하는 주체로는 정치인을 꼽은 사람이 73%로 가장 많았다. 이는 보혁 갈등의 심각성과 정치권에서 주요한 정쟁화 소재로 활용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동 조사에서 응답자 자신의 경우 34.3%가 '중도', 28.8%가 '진보', 27.5%가 '보수'라고 응답,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다. 『연합뉴스』, 2003년 8월 8일.

을 위한 ‘강요된 선택’의 의미를 지녔으며, 반미주의는 친미적 독재정권에 대한 ‘우회적 저항의 담론’으로서의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냉전체제에서 탄생한 일방적 친미주의와 반미주의는 냉전의 종식과 아울러 존재의 기반을 상실해가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상황에서 현실적합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미국과 북한에 대한 새로운 현실적 인식이 필요함을 주지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는 다양한 견해와 의견이 존재하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차이가 인정되는 ‘공존의 미학’은 시민사회형성에 있어 핵심적인 가치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냉전문화는 공존과 관용의 일상화를 억제했고, 사회가 보수와 진보라는 배타적 이분법적 구도로 재편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한국사회는 아직 냉전문화의 유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제기되는 외교안보적 이슈와 북한문제에 대해 여론은 양극화될 수밖에 없으며, 끊임없는 소모적 정쟁의 과정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아울러 정책의 추진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현안에 대한 국민여론의 양극화와 정부의 대처능력의 한계는 바로 이와 같은 점에 기인하는 것이다.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를 지향하는 구체적 노력 역시 이와 같은 내적인 냉전문화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북한과 미국에 대한 현실적 인식의 형성이 없이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은 추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 점에 있어서 한반도 냉전체제의 해체를 위한 외교안보적 노력과 아울러 동시에 남한사회에 뿌리깊게 형성되어 있는 냉전문화의 해소를 위한 성찰적인 내적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최근의 남남갈등 추이

남북한의 화해를 전제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공동의 발전을 추구하는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전환과정은 한반도 냉전구조와 냉전문화의 온존상태에서 특히 국민적 합의구도가 설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취약성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남북관계 변화가 냉전체제의 관성을 지닌 남한사회내의 냉전문화와 상충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통일문제를 둘러싼 남남갈등의 형태로 표출되었으며, 보혁 갈등의 현재화라는 문제를 야기 시켰다. 따라서 남북관계 패러다임의 전환은 이후 ‘퍼주기 논쟁’이라는 ‘잠재적 보혁 갈등구조’¹⁰가 부각되면서 빛을 바래기 시작했으며, 대북정책의 추진력도 점차 약화되기 시작했다. 퍼주기 논쟁으로 시작된 보혁 간의 잠재적 갈등은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점차 현재화되는 추이를 보여 왔으며, 최근의 경우 이슈마다 첨예한 대립구조를 형성하는 동시에 대규모의 조직과 인원을 동원하는 시위와 집회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통일문제를 둘러싼 보혁 갈등은 특히 국가보안법철폐문제와 맞물려 심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04년 10월 4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10만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종교계가 개최한 구국 기도회가 열렸다. 집회에서 주최 측은 선언문을 통해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비상시국”이라며 “국가보안법 등 이념 문제로 국론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력마저 소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 중 일부는 “노무현 정권 물러가라”,

¹⁰ 보혁간의 조직적·직접적 충돌을 수반하지 않은 여론상의 갈등이었다는 점에서 통일문제를 둘러싼 보혁 갈등의 잠재적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보혁간의 조직적 의사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일 타도”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인공기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진을 불태웠다. 기도회 이후 같은 장소에서 보수단체인 ‘반핵 반김 국권수호 국민협의회’가 주최하고 전 국무총리와 전 대법관 등이 공동대회장을 맡은 ‘국보법사수 국민대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대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보법 폐지 발언 취소를 요청하고 열린 우리당에게 국보법 폐지 당론 철회를, 한나라당에게 국보법 사수 당론 확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와 같은 행사에 대해 보혁을 대변하는 아래의 두 신문의 상이한 반응은 한국사회의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상징하고 있다.

…풀어주자는 쪽은 우리가 먼저 보안법을 철폐해야 북에 대해 무엇을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그렇다면 비전향 장기수를 보내놓고 국군포로를 단 한 명이라도 넘겨받았는가? 그리고 그들을 보내면 남북어부도 돌려보내라고 빈말이라도 한 번 딱 부러지게 해보았는가? 북한의 ‘남조선 혁명’ 역량과 남한의 ‘갈 데까지 간’ 증후군은 계속 축적되고 있다. 위기를 느낀 국민다수와 자유·보수 진영, 기독교 세력은 보안법 철폐 반대에 명운을 걸고 시청 앞 광장을 메웠다. 집권측은 이제 분명한 선택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그들은 우리의 지지층…’이기에 ‘갈 데까지 가는’ 증후군에 ‘동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걱정해 철폐 반대에 명운을 건 진영을 아우를 것인지를 결정적인 선택인 것이다.¹¹

맑은 가을하늘 아래 서울광장에서는 시대착오적인 시국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극우 단체의 시위는 흔히 보아온 일이지만, 종교단체까지 나서 극우 목소리를 내며 대규모 선동적 정치 집회를 연 것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보안법 폐지는 기본적 인권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되찾고 남북 화해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갈등과 분쟁을 화해와 일치로 치유해야 할 교회가 악법 폐지에 찬성은 못할망정 반대하는 것은 본분에 어긋난다…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도 ‘구국기도회는 나라

¹¹ “류근일칼럼,” 『조선일보』, 2004년 10월 5일.

와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대형 교회 목회자를 비롯한 수구 기독교 세력의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독재자를 위해 구국기도회를 했던 보수 기독교 교단이 다시금 극우 세력의 이해를 대변하는 구국기도회를 열고 이를 전국 주요 도시와 국외로 확산시켜가겠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갈등을 부추기는 대규모 동원식 집회는 중단되어야 한다.¹²

이는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보혁 갈등의 한 사례에 불과하다.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추진과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이후의 남북관계발전으로 싹트기 시작한 남한사회의 보혁 갈등이 사회적 현상으로 가시화된 것은 2002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미군 훈련 궤도차량에 의해 두 명의 여중생이 사망한 사건과 이를 둘러싼 이후 일련의 전개과정은 남한사회의 보혁 갈등이 현재화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¹³ 당시 사망한 여중생들에 대한 자발적 촛불시위는 한국의 대선과정과 결부되면서 국내외의 주목을 끌었다.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촛불시위를 주도하면서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여중생 범대위)를 결성하였으며, 이들은 부시대통령의 사과, 한·미행정협정(SOFA)의 전면 개정 등을 주장했다. 추모행사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반미자주투쟁'형태로 전개되었으며, 미 부시대통령의 간접적 유감 표명과 한·미간 SOFA 운영에 대한 개선 합의 등의 결과를 도출하는데 기여를 했다. 그러나 여중생 범대위가 촛불시위를 주관하면서 순수한 추모행사가 정치적 성격을 띠기 시작하는 것에 대해 집회측 내외에서 우려가 표명되었다. 특히 보수진영은 대선에 이를 이용하려한다는

¹² 사설 “기독교를 위한 ‘구국기도회,’” 『한겨레신문』, 2004년 10월 4일.

¹³ 박종철·조한범 외, 『월드컵에서 나타난 국민통합효과의 계승·활용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3), pp. 29-35.

점과 추모행사중의 반미시위가 한·미동맹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미 언론에서 촛불시위가 반미시위로 보도되면서 미국 내 반한감정도 현실화되었으며, 이는 다시 남한 사회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여중생추모집회를 둘러싸고 진행되었던 촛불시위와 일련의 대립과정은 이념적 보혁 갈등의 전형적 형태라고 볼 수는 없으며, 특히 ‘월드컵효과’가 반영된 혼합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여중생추모집회를 둘러싸고 부각되었던 보혁 갈등은 북핵문제와 미국의 이라크침공, 한국군의 이라크 파견 등 이슈들이 중첩되면서 점차 이념대립의 성격을 띠고, 반복되는 양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따라서 여중생추모집회 이후 한국사회의 보혁 갈등은 잠재적 차원에서 벗어나 이슈들이 제기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 구조를 형성하는 징후들을 보이고 있다.

남한사회의 보혁간의 갈등은 2003년 3·1절 행사를 계기로 다시 전면화 되었다. 여중생추모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보혁간의 대립구도는 보수층의 결집을 촉진시켰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2003년 3·1절 행사를 계기로 부각되어 나타났다. 2003년 3월 1일 서울에서 열린 ‘평화와 통일을 위한 3·1 민족대회’는 분단 후 최초의 남북공동행사라는 상징성을 지녔으나, 보혁 간의 대립이라는 갈등적 요소가 부각됨으로써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2003년 3·1절을 계기로 보수진영은 대규모의 조직적 동원을 통해 반북·친미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이를 통해 진보진영에 대한 견제를 시도했다. 3월 1일 『한국자유총연맹』과 『한·미우호협회』 등 110여 개의 종교·시민·사회단체가 10만여 명을 동원, ‘반핵 반김과 미군철수 반대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북핵 개발 저지, 미

군 철수 반대’, ‘북한은 우리의 주적, 미국은 우리의 혈맹’ 등의 구호와 아울러 태극기와 성조기가 함께 등장, 집회의 성격이 ‘반북·친미’임을 분명히 했다. 당일 여의도 한강 시민공원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등 보수 기독교단체 주최로 7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금식기도회’가 열려 ‘북한 인권개선과 탈북난민 안정’ 등을 주제로 한 기도회가 진행되었다.

반면 진보진영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미국의 이라크 공격 반대 등을 주제로 보수진영과 대조적인 집회를 개최했다. 2003년 3월 1일 여중생 범대위, 한총련 등 진보적 사회단체들은 서울 탑골공원에서 2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미국의 이라크 침공 계획과 대북 강경정책을 반대하는 ‘민족자주, 반전평화 실현 쏫불대행진’을 열었다. 행사에서는 통일기가 태극기와 함께 등장했으며, “이북동포 환영해요”, “미국은 즉각 전쟁행위 중지하라”, “살인미군 철수” 등의 구호가 등장했다. 또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3·1절 기념 시국성명서를 발표, 북·미 대화, 남북 평화공존 및 교류협력, 그리고 미국의 이라크 공격 반대 등의 입장을 표명했다.

2003년 4·19 혁명 43주년 기념일을 전후해서도 보혁 갈등이 재현되었다. 보수진영인 ‘반핵 반김 자유통일 4·19 청년대회’ 청년본부는 4월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2천여 명이 참석한 집회를 개최,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고 북한 핵미사일과 인공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모형을 불태우는 등 반북·친미의 주장을 부각시켰다. 진보진영의 단체들도 집회를 열고 미국의 이라크 공격 및 한국의 파병 반대 등 반전주장을 통해 보수진영과 다른 주장을 펼쳤다.

한국전쟁은 보혁간의 이념대립에 있어 그 자체로서 민감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바, 2003년 6월 25일을 전후해서 한국사회의 보혁 갈

등은 보다 심화된 형태로 표출되었다. 보수진영은 ‘반북·친미·안보 태세확립’을, 진보진영은 ‘반미·자주·평화’ 형태의 상반된 주장으로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였다.¹⁴ 2003년 8·15 기념행사에서도 보혁 갈등이 재연되었다. 자유시민연대·베트남참전전우회 등 보수단체의 회원 1만 여명은 8월 15일 서울 시청 앞에서 ‘건국 55주년 반핵 반김 8·15국민대회’를 개최했으며, 같은 날 종각에서는 2만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통일연대와 여중생 범대위,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의 대부분이 참여한 ‘반전평화 8·15통일대행진’행사가 개최되었다.

현재 한국사회의 보혁 갈등은 거의 대부분의 관련 이슈들에서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으며, 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관련인사의 언급 하나 하나에 대해서 보혁 양진영의 민감한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지도층 인사들 역시 이를 해소하는 노력보다는 양진영의 한쪽에 서서 대화와 타협 보다 자신들의 주장 알리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종종 보이고 있다.

과거 잠재되어 있던 한국사회의 보혁 갈등은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집권세력의 교체, 남북관계 개선 및 한·미관계의 성격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과 맞물려 현재화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다양성이 용인되는 가운데 대화를 통해 합의를 유도해 낼 수 있는 사회적 지형이 협소하다는 점이다. 이는 한반도의 분단과 냉전구조, 그리고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냉전문화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¹⁴ 2003년 6월 21일 재향군인회 등 110여 개 보수단체는 서울시청 앞에서 20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반핵반김 한·미동맹 강화 6·25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반면 여중생 범대위와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통일연대)’ 등 진보진영은 2003년 6월 25일 저녁 광화문에서 ‘6·25전쟁 53주년 맞이 한반도 평화실현 촛불기원의 밤’을 개최했다.

보혁 갈등의 해소를 위한 방안의 강구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1. 남북 사회문화공동체의 재인식

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사회문화공동체

정부의 통일방안은 노태우 정부시기에 처음 제시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89년)을 보완, 김영삼 정부가 1994년 8월 제시한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 축을 계승하고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점진적 방식의 통일을 지향하는 것으로 ‘접근을 통한 변화’와 ‘선 교류 후 통일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하나의 민족공동체건설을 목표로 점진적, 단계적으로 통일을 추진해나가는 것을 말하며 통일과정을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 완성 등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¹⁵

1단계인 화해협력단계는 남북한이 적대와 불신,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상호신뢰 속에 남북화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면서 실질적인 교

¹⁵ 통일부, 『2004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04), p. 21.

류와 협력을 통해 화해와 공존을 추구해 나가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남북한은 상호간의 체제 인정을 통해 분단 상태의 평화적 관리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또한 각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적대적 공존에서 화해적 공존으로 전환하는 단계이다.¹⁶ 이 과정에서 남북한 간 교류협력의 활성화는 실질적인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되며,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된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단기적으로 화해협력단계의 심화를 의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단계의 주요한 목표인 화해와 협력의 심화는 평화를 제도화하고 통일을 보다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단계에 해당하는 남북연합단계로 발전하게 된다.

2단계인 남북연합기는 완전한 통일국가 건설을 전제로 남북한이 잠정적 연합을 구성하는 단계이다. 2단계에서는 평화와 민족공동생활권의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며, 과도적 통일체제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남북연합단계에서는 남북한이 각각 대외적 주권을 유지하면서 남북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남북정상회의, 남북평의회, 남북각료회의, 남북공동사무처 등 구체적 기구들을 설치하게 된다. 사실상 과도적 통일체제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남북연합단계는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와 정부형태를 유지하지만, 통일지향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단계로 상정되고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따르면 2단계인 남북연합단계의 주요과제는 사회적, 문화적·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과도적 통일체제의 형성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의 추진이 가능한 시기로 해석되고 있다. 남북연합기에는 사회문화공동체의 완성이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바, 사회문화 분야에서 통일의 기초가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⁷

¹⁶ 위의 책, p. 21.

3단계인 통일국가의 완성은 남북연합기에서 형성된 민족공동체를 기반으로 남북한의 완전한 정치적 통일을 이루는 1민족 1국가체제로의 형성을 의미한다. 제 3단계인 통일국가 완성단계는 “남북연합단계에서 구축된 민족공동의 생활권을 바탕으로 남북한 두 체제를 완전히 통합하여 정치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1민족 1국가로의 통일을 완성하는 단계”로 해석되고 있다. 통일국가의 완성단계에서는 남북한 의회대표들에 의해 마련된 통일헌법에 따라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 통일정부,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1민족 1국가로의 통일을 완성하게 되며, 따라서 남북한의 실질적 통일이 달성되는 단계로 상정되어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사실상 중간단계인 남북연합의 형성에 맞추어져 있으며, 점진적 과정을 거쳐 남북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민족공동체를 형성하여 통일국가를 형성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¹⁸

대북화해협력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은 점진적·단계적 과정을 거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실천하는 것을 지향하는 통일정책으로 이해될 수 있다. 민족공동체와 관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민족생활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성격의 공동체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분야별로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사회공동체, 정치 공동체”¹⁹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구체적 추진방법은 비정치 분야인 사회·문화·경제 공동체와 정치·이념 분야인 정치공동체를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석에 따르면 사회문화, 경제공동체의

¹⁷ 위의 책, p. 22.

¹⁸ 위의 책, p. 22.

¹⁹ 윤덕희·김규륜, 『한민족 공동체방안 연구: 사회·문화·경제 교류협력 중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p. 3.

형성에 주목하는 민족공동체의 실현은 ‘민족통일’과 관계가 있으며, 정치공동체까지 포함한 민족공동체의 실현은 ‘국가통일’로 규정된다. 따라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궁극적인 통일실현(민족공동체 형성의 바탕위에 통일국가를 이루는 실질적인 통일) 이전의 중간단계로서 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조성단계와 남북연합 단계를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²⁰ 이와 같은 관점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민족통일과 국가통일의 개념을 구분하여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입장은 정치공동체의 완성을 포함하는 민족공동체 형성 여건조성을 위해 비정치 분야의 사회·문화·경제공동체 형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통일방안과 사회문화공동체의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은 사회문화공동체가 통일의 ‘한 단계’이자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는 “내부에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체계의 차이는 존재하나, 이 차이는 단순한 이질성으로서 배타적·분열적 작용을 하지 않고 상호보완적 관계아래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의 형성은 양 사회의 이질화 현상이 완전히 동질화를 획득하게 되는 상태에서보다는 상호 협력, 공존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²¹ 이 해석에 따르면 남북한 사이의 사회문화의 제 기능들이 상호 양립 및 절충될 수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과정은 양 체제 간에 동질성을 증대시키는 문제로 해석

²⁰ 위의 책, pp. 3-4.

²¹ 윤덕희·김도태,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pp. 4-5.

된다. 이와 같은 동질성의 증대는 결국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증대문제와 같게 된다.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은 사회·문화·경제공동체 형성에 필수적인 수단이자 과정이라는 것이다.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이 상정하고 있는 민족공동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민족생활의 전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성격의 공동체를 지칭하는 개념이며, 분야별로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사회공동체, 정치공동체로 구분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리고 민족공동체의 실현방법으로는 비정치적인 사회·문화·경제공동체와 정치, 이념적인 정치공동체를 구분해야 하며, 사회·문화·경제공동체의 형성에 초점을 둔 민족공동체의 실현은 민족통일이며, 정치공동체까지 포함한 민족공동체의 실현은 국가통일로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정치공동체까지 포함하는 국가통일이 한민족공동체 형성의 최종적 형태가 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문화·경제공동체 형성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문화·경제공동체는 정치공동체형성을 위한 사전적 과정으로서 이해된다. 이와 같은 입장은 정치공동체와 이념공동체의 실현 이전이라도 민족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공동체 형성을 유보할 수 없으며, 사회·문화·경제공동체의 형성은 궁극적으로 정치공동체 형성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²² 이는 <표 IV-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²³

²² 윤덕희·김규륜, 『한민족공동체 구체화방안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pp. 3-4.

²³ 통일연구원, 『남북한 '실질적 통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민족공동체형성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2), p. 63.

진이 정책의 주요목표로 설정되어 있다.²⁵

통일국가 단계에서는 사회문화 분야 민간단체의 통합, 북한지역의 사회·문화시설 확대를 통해 북한주민들의 과도기적 심리불안을 치유하고 다원주의적 사회질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를 위해 남북주민간의 화합과 공영을 위하여 광범위한 국민 교육·홍보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북한주민 재교육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및 전문가 양성, 남한주민에 대해서도 민족동질성 증대와 통일 후 사회적 갈등 해소, 통일한국의 건설 등을 위한 교육의 실시가 정책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²⁶

이와 같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관련하여 논의되어온 기존의 해석에 따르면 사회문화공동체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²⁷

첫째, 사회문화공동체는 경제공동체 및 정치공동체와 더불어 민족공동체를 구성하는 부분 요소의 하나이다.

둘째, 사회문화공동체는 경제공동체와 함께 정치공동체 구성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사회문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가 정치공동체에 선행되는 이유는 논리적 적합성이라기보다는 분단반세기에 걸친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사회문화공동체의 형성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넷째, 사회문화공동체의 구성은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하여 시작될 수 있다.

²⁵ 위의 책, p. 70.

²⁶ 위의 책, p. 74.

²⁷ 이우영, “사회문화공동체의 개념,” 『남북한 '실질적 통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민족공동체형성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2), pp. 26-27.

다섯째,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은 정치공동체의 이전 단계에서 시도 될 수 있으나, 경제공동체나 정치공동체에 비해서 사회문화공동체의 구성은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여섯째, 사회문화공동체도 남북관계의 성격에 영향 받을 수 있다.

일곱째, 사회문화공동체의 형성은 단계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에 대한 기존의 입장은 실질적 교류협력을 남북 이질화의 해소, 그리고 이를 통한 동질성의 증대와 공동체 형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남북양자관계의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분단의 내적인 영향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한 사회내부의 기반형성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남북 사회문화공동체의 재해석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한 방법론으로 근본골격과 방향성은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몇 가지 점에서 고려해야할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

먼저 통일단계의 구분의 적용에 있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현실적 판단이 필요하다. 공식적 통일이 완성되는 3단계의 통일국가 단계는 통일과정이 아니라 통일 이후의 문제를 다루는 시기이다. 따라서 통일을 위한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화해협력기 및 남북연합기는 통일국가단계와 통일 이전과 통일 이후라는 기준으로 구별될 수 있다. 3단계의 경우 통일의 준비과정으로서 사실상 의미를 지니지 않으며, 따라서 통일의 준비단계는 화해협력기와 남북연합기로 구별될 수 있다. 현 단계는 남북한 사회·문화·경제공동체가 형성

되고 사실상의 통일이 완성되는 단계로 설정된 남북연합기를 준비하는 화해협력기에 해당한다.

공동체란 내적인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체계를 이루는 통합상태를 의미하며, 차이들이 구조적 차별로 재생산되지 않으며 공동체내의 일상생활 및 공동목표달성을 본질적으로 저해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내의 민족구성원들이 자신들을 하나의 상상된 정치공동체로 상정하는 상황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앤더슨의 “민족은 본래 제한되고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되는 정치공동체(imagined political community)”²⁸라는 정의는 민족공동체의 이해에 상당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의에 입각할 경우 민족구성원들은 대부분 자기 동료들을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며 만나지도 못하지만 구성원간에 존재하는 상호교통(communion)에 의해 상상된 것이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해석은 민족공동체의 정립에 있어 민족구성원들을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식으로 내면화시키는 정치공동체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의의 의미에서 남북한 사회문화적 통합과정은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남북의 제도적 통일과 통일과정 및 이후의 내적 통합을 포함하는 전반적 과정을 포괄하며, 민족공동체 역시 이와 같은 총체적 의미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문화공동체는 분단체제로 인해 형성된 사회문화적 제도차이를 해소하고, 분단으로 인한 이질화와 그 결과들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구조적 또는 반복적으로 재생산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사회문화공동체는 통일을

²⁸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1983); 윤형숙 역,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서울: 나남, 1991), p. 21.

지향하는 과도기적 단계에서 그 단초가 형성될 수 있으나 완성되는 것으로 상정될 수 없다. 사회문화공동체는 통일국가 형성 이후의 일련의 실질적 통합과정을 거쳐서 달성될 수 있는 장기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과 관련지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남북연합기라는 준비적·과도적 상태에서 사회문화공동체의 달성가능성의 문제이다. 기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사회문화공동체는 이념과 정치통합이 완성되는 국가통일 이전의 민족통일로 상정되어 있으며, 남북연합기에 사회문화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으로 상정되어 있다. 이는 통합에 대한 기능주의적 접근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사유와 생활세계를 지배하는 사회문화의 영역은 정치와 경제의 영역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며, 따라서 정치공동체 형성을 위한 과도적 단계로서 사회문화공동체를 인식하는 것은 기계적 해석으로서의 무리를 내포하고 있다.

공동체는 내부구조를 이루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가 분리되어 해석될 수 없으며, 분야별로 차등적으로 완성되는 단계적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각 내부구조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공동체를 형성하는 관계에 있다. 특히 정치공동체는 공동체가 하나라는 자의식과 ‘하나를 위한 헌신적 희생’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정치공동체가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리된 개념으로 사회문화공동체가 형성된다는 해석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족공동체에 대한 단계별·분야별 접근을 시도하는 기존의 입장은 각 단계의 달성을 위한 남북한간의 관계 개선에 주목하며, 결과적으로 통일을 위한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을 실질적인 수단으로 인식한

다.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한간의 동질성 증대가 민족공동체를 실현하는 현실적 방법론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류협력 중시 입장은 이론적으로 기능주의적·신기능주의적 통합론과 문화변용론적 해석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기능주의적·신기능주의적 입장²⁹은 서로 독립된 두 사회가 교류협력을 통해 상대방의 사회문화구조의 우위가 확인될 때 열등한 사회가 우월한 사회로 동질화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이나, 사상의 우월성이 체제간의 동질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문화변용론은 상이한 문화체제가 접촉과정을 통해 일방, 혹은 양방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문화간의 접촉이 증가할수록 문화의 유사성과 통합이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들에 입각할 경우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는 결과적으

²⁹ 기능주의적 통합론과 신기능주의적 통합론은 이론적으로 기능주의이론을 공유한다. 통합과 관련, 기능주의이론(Functionalism)은 호혜적인 경제교류의 확대는 정치, 사회, 문화 등 타 분야의 통합을 촉진시킨다는 관점이며, 신기능주의이론(Neo-Functionalism)은 기능주의 이론을 전제로 정치 분야를 보다 중요한 영역으로 주목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 입장은 각 기능의 분리가능성에 대한 관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신기능주의의 경우 기능적 협력과 정치적 협력의 분리가능성을 배제하며, 제도의 형성을 지향한다. 반면 기능주의의 경우 선 기능적 협력, 후 정치적 협력의 도모를 지향한다. 미트라니(David Mitrany)의 기능적 통합론은 기능주의적 입장을 통합에 적용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트라니는 한 분야의 기능의 영역(경제 분야)에서의 성과는 다른 분야에서의 통합(정치 분야)을 유도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비정치 분야의 통합을 유도하며, 특히 정치 분야의 갈등을 억제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David Mitrany, *A Working Peace System* (Chicago: Quadrangle Books, 1966); 따라서 교류협력을 통한 경제·사회공동체를 선 건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공동체 건설을 지향하는 민족공동체론 기능주의적 입장과 상당부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능주의를 정치통합을 지향하는 분단국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 신기능주의적 통합론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분단민족간의 통일은 정치통합을 의미하는 체제간의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제통합이 항상 정치적 통합으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정치 분야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현호, 『남북한 민족통합론』 (서울: 형설출판사, 2003).

로 남북 사회문화적 동질성의 증대로 해석되는 것이다.³⁰ 즉 체제간의 접촉과 교류의 증대가 양 사회문화차원의 동질성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남북한간 교류와 협력의 증가가 양 체제간의 이질성 해소와 동질성의 증가로 이어지며 종국적으로 남북사회통합의 기초가 된다는 판단과 맥을 같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입장은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특히 통합에 관한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적 접근, 그리고 문화변용론의 경우 분단체제간의 양자관계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분단으로 인한 체제 내적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남북한의 경우에만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남북 양 체제는 다른 체제와 다르게 상호 적대적 공존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일반적 체제와는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다. 상호 이질적인 체제상의 특성을 넘어 남북한은 동일한 민족적 역사를 공유하나, 분단으로 상대방 존재의 부정을 스스로의 존재의 타당성으로 삼아왔다. 즉 단순한 체제간의 차이를 넘어 상대방에 대한 부정을 통해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시켜왔으며, 이는 각각의 주민들에 대한 내면화 과정을 통해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재생산되어 왔다. 이는 남북한 체제는 일반적인 체제간의 사회문화적 차이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이질성 해소와 통합상태의 증대는 단순한 교류협력의 증대와 이를 통한 동질성의 증대라는 일반적 방식과는 다른 의미의 접근이 필요하게 된다.

사회문화공동체형성에 대한 기존의 입장은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공동체 형성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남

³⁰ 윤덕희·김도태,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p. 3.

북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이질성의 자체적 해소문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남북한은 상이한 체제와 상이한 근대화 경로를 걸어왔으며, 한국전쟁과 냉전체제의 최전선에서 적대적 공존관계를 유지해왔다. 세계적 냉전구조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냉전구조는 해체되지 않고 있으며, 냉전구조의 남북한 사회내의 내면화 상태인 냉전문화 역시 공고한 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동질성 증대를 위한 교류협력의 중요성과 아울러 공동체 형성을 위한 자체적 기반의 마련 역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의 주요 과제가 되어야 한다.

남북관계의 개선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남한사회내의 갈등구조 형성은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통일정책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양자적 관점에 집중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으로 인한 내적 파급효과와 냉전문화와의 상충, 대북정책 추진기반 마련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된 측면이 있다. 이는 남한사회내의 갈등구조의 부각과 아울러 대북정책의 추진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해석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전제로 한다. 주지하다시피 남북관계는 반세기 이상의 적대적 상호공존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이는 양 체제간의 이질성이 일반적인 체제간의 차이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해석에 있어서 각 단계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필요하다. 남북 양 체제간의 적대적 공존관계의 특수성과 장기적인 냉전관계의 지속은 양 체제 내의 이질성을 심화시켜왔으며, 이는 주민의식의 내면화 과정을 심화시켜왔다. 결과적으로 남북 양 체제는 체제간의 교류협력의 확대와 이를 통한 동질성의

증대라는 일반적 과정과는 다른 의의를 지니게 된다. 이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적용시킬 경우, 첫 번째 과정인 화해협력기가 남북연합기와 남북통일단계에 비해서 중요성을 지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장기적인 대립관계와 이를 통한 이질성의 심화를 해소할 수 있는 준비과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해에 있어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적용시킬 경우 화해협력기는 남북연합 및 통일단계에 선행하는 단계이자, 이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된다. 대립관계의 청산과 화해협력적 관계의 형성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다른 일반적인 체제간의 상호수렴관계와 다르다는 것이다. 즉 남북관계의 개선과 통합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화해협력기는 핵심적인 중요성을 지니게 된다.

이와 같은 입장에 근거할 경우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있어 화해협력기는 가장 중요한 단계에 해당한다. 화해협력기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남북연합기는 사실상 통일을 위한 남북한간의 공식적 합의를 의미하며, 따라서 비교적 단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3단계인 통일과정으로 이행하는 단기적 과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연합기는 일종의 요식행위에 해당하는 절차적 의미만을 지니게 될 것이다.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연합으로의 합의는 양 체제간의 통일에 대한 합의를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적대적 공존관계에서 형성된 다양한 차이들이 상당부분 해소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입각했을 때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단계별 지속기간은 장기적인 화해협력기와 비교적 단기간의 남북연합기, 그리고 이 과정에 이어진 통일단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남북통합을 위한 전제조건들이 화해협력기에 대부분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해석할 경우 화해협력기의 과제는 단순한 남북관계 진전에만 국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양 체제간에 내재하는 이질성을 해소할 수 있는 체제내적인 문제들의 해소가 주요 정책과제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 ‘성찰적 통일’ 인식의 확산

한국사회의 근대화는 한국사회내부와 외부로부터 이중의 강제성이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자율성을 결여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봉건 조선은 근대화의 물결 앞에서 무기력하게 자주적 근대화의 기회를 상실했으며 이후 한반도는 40여년에 이르는 긴 식민지적 근대화의 여정에 들어섰다. 식민지체제하에서 한국의 근대화는 철저하게 일본제국주의의 패권적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타율적이며, 왜곡된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 외세에 의한 강요는 이에 대한 반발을 초래했으며, 따라서 한국의 근대민족국가의 인식은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적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따라서 민족주의적 경향은 좌우의 이념적 지향성을 떠나 남북한체제의 정당화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 중의 하나로 기능해 왔다.

북한의 경우 항일 빨치산 투쟁은 정권의 탄생과 지속을 정당화하는 ‘신성’의 영역으로 다루어져왔으며, 이와 관계된 모든 요소들은 ‘신화’로 재생산되어왔다. 반일과 반미를 내용으로 하는 반제국주의와 ‘제국주의에 의해 점령당한 남한사회의 해방’이라는 북한식 표현이 의미하는 바대로 북한체제는 민족주의를 북한체제의 정당화와 대국민설득기제로 전 방위에 걸쳐 활용해왔다. 남한사회 역시 일제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는 정권의 정당화에 있어서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되었으며, 개인의 자유보다는 민족전체의 운명과 발전이 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겨져 왔다. 남한사회의 압축적 성장과 근대화는 ‘민족중흥’이라는 민족단위의 집합적 가치에 의해 정당화되어왔다.

일제 강점기가 왜곡된 근대화의 역사적 경험과 아울러 남북한에 모두 강한 민족주의적 지향성을 정착시켰다면, 분단은 한국의 근대화와 발전의 행보에 이념적 족쇄를 채웠다고 할 수 있다. 해방공간 역시 한국사회의 자율적 근대화의 기회와 자율적 주체를 형성할 기회였다고 할 수 없는바, 기본적으로 한국사회는 스스로의 발전에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강제성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소련군과 미군은 점령군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남한과 북한에서 군정을 실시함으로써 해방공간의 자율성을 제약했다. 따라서 식민의 경험과 해방공간은 공히 한국사회의 자율적 근대화를 위한 역량을 제약했으며, 외세에 의해 한국사회는 이념적, 문화적 다양성을 극도로 제약당했다. 이는 한국사회가 1900년대 초에서 1950년 초까지의 중요한 근대의 입문기에 정신적, 물질적 양 측면에서 정상적 근대화의 경로에서 이탈해 있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전쟁은 수백만의 인명살상을 수반한 극단적 이념 대립이었다는 점에서 남북한내의 이념적 지형을 극도로 협소화 시켰으며, 이후 남북한은 세계적 차원의 냉전구조의 최전선에서 동서양 진영의 첨예한 대립을 대리해야 했다. 이는 양체제의 근대화 경로와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의미를 지니는 조건이었다.

남한사회의 압축적 근대화는 분단상황과 권위주의정권체제하에서 이념적, 문화적 다양성을 극도로 제약당한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었다. 박정희정권은 저발전 상태의 대중적 상실감과 이념적 대립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족주의와 성장지상주의로 포장된 압축적 발전을 시도했으며, 그 결과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빠른 산업화를 달성할 수 있었다. 미국은 한반도가 냉전체제의 최전선에 위치해 있다는 지정학적 요인들로 인해 남한정권의 적극적 후원자였으며, 남한의 권위주의정권은 강압적 통제방식을 활용, 수출주도형 산업화 모델의 논리를 충실히 적용시켰다. 물질적 측면에서 본다면 남한사회의 발전에 대해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은 상당부분 타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압축적 성장이 남한사회에 가져온 물질적 풍요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남한사회의 압축적 발전은 이에 병행하여 ‘압축적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점이다. 발전은 심각한 불균형 상황에서 진행되었으며, 분배는 성장논리에 의해 배제 당했다. 사회의 다양성은 통제되었으며, 시민사회의 정당한 요구들이 종종 반정부, 혹은 반체제적 행위로 억압되었다.

이와 같은 점은 분단체제하에서 진행된 남한의 압축적 성장이 비정상성을 내재한 것이었으며, 전후의 서독과 다르게 근본적으로 자기성찰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단과 냉전체제하에 진행된 남한의 근대화는 극단적 이념대립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따라서 근대화에 수반되는 남한사회내의 정상적 시민사회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발전 역시 저해되었다. 이는 남한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쳐왔다.

분단과 아울러 냉전체제의 최전선에 대치한 남북한은 서로 상이한 방식으로 근대화의 여정을 걸어왔다. 남북한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두 체제의 이념적 대립이 극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놓였으며, 남북한의 근대화 역시 이 과정에 의해서 지배되어 왔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내포한 것이었다.

IMF 위기에서 경험한 것처럼 남한사회의 근대화는 완결된 구조를 가지지 않으며,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선진자본주의 국가들과 비교하여 시장경제체제, 사회복지체제, 법치주의와 정치적 민주화의 완성, 문화적 다원주의 형성의 측면에서 남한사회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한다. 무엇보다 분단체제와 냉전문화에 의해 왜곡된 사회의 정상화는 남한사회가 풀어야 할 우선적 과제이다. 따라서 남한의 성공은 아직도 갈 길이 남아있는 ‘절반의 성공’인 셈이다. 자본주의적 근대화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자 해소방안으로 제시된 ‘성찰적 근대화’(reflexive Modernisierung) 개념은 분단체제에서 진행된 남한사회의 비정상적 근대화의 문제를 해소하는 대안의 마련에 있어서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성찰적 근대화’는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과 자기 사회에 대해 지식을 비판적으로 적용시키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앤서니 기든스, 올리히 벡 등에 의해 제시된 이 개념은 현존하는 자본주의적 근대화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화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하는 포스트모더니즘과는 다른 맥락의 논의라고 할 수 있다.³¹ 이 논의에 의하면 ‘근대화의 기획’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의 시제이며, 성찰적 노력에 의해서 한계가 극복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앤서니 기든스와 올리히 벡 등은 서구의 근대화가 전 지구적 대전환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 민족, 전쟁, 기아 문제 등에 무력한 불완전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와 같은 문제들의 해소를 위한 대안이 바로 성찰적 근대화라는 것이다.

³¹ 앤서니 기든스·올리히 벡 외, 임현진 외 역, 『성찰적 근대화』 (서울: 한울, 1998).

성찰적 근대화에서 주목하는 기존의 근대화과정은 불완전한 것이다. 울리히 벡이 현대사회를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험이 상존하는 위험사회로 진단하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이다. 울리히 벡에 의하면 위험사회로 진단된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성찰적 근대화모델이라는 것이다. 성찰적 근대화는 기본적으로 물질적 풍요를 가져온 산업화의 의미를 인정하는 가운데 근대화의 문제, 즉 위험의 해소를 지향한다. 울리히 벡에 의하면 위험이 상존하는 현실을 옹호하는 대신 위험의 실상을 드러내놓는 것이 위험에 대한 통제와 대응책을 찾는 길이다.

기든스는 전지구화(globalization)의 심화와 탈전통(post-traditional) 질서의 등장, 그리고 사회적 성찰성(social reflexivity)을 현대사회의 세 가지 주요 발전 경향으로 인식한다. 현대사회의 대전환과정은 기존의 근대화과정에 적용된 진단과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위험’(manufactured risk)이며, 이는 기든스가 제시하는 제 3의 길이라는 대안제시의 이유이다. 기든스는 사회주의가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으며, 시장과 개인주의를 내용으로 신자유주의에 의존하는 자본주의 역시 한계를 지닌 것으로 파악한다. 기든스가 제시하는 성찰성은 ‘대화민주주의’(Dialogic democracies)와 ‘적극적 복지’(positive welfare) 개념에 반영되어 있다. 특히 기든스가 제시하는 ‘대화민주주의’(Dialogic democracies)는 동의를 획득하는 것만을 지향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위르겐 하버마스의 이상적 담화상황과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기든스는 공적 영역에서 대화가 개인 혹은 전지구적 차원의 공동체가 상호 관용관계에 있는 타자와 공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대화자체는 대상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수단이자 신뢰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다. 기든스가 제시하는

‘적극적 복지’(positive welfare)는 기존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 국가의 개념을 넘어선 새로운 사회정책 개념이라 할 수 있다.³²

성찰적 근대화모델은 탈전통의 과정을 겪어온 근대화자체에 대해서 비판론에 빠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과 다르다. 성찰적 근대화모델은 기존의 근대화과정의 원래 기획의 반쪽짜리 성공이며, 이를 인정함으로써 성찰적 노력을 통해 나머지 반쪽을 채우는 적극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근대성의 처음 반쪽은 기존의 과정을 의미하는 ‘단순한 근대화’(einfache Modernisierung)이며, 나머지 반쪽은 ‘성찰적 근대화’(reflexive Modernisierung)에 의해 채워짐으로써 원래의 근대화의 기획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³³

성찰적 근대화모델은 여러 가지 점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한국사회에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남한사회가 압축적 근대화를 이루어왔다는 점에서 성찰적 근대화모델에서 중요한 시사점들이 발견될 수 있다. 남한의 초고속 성장은 동시에 근대화가 수반하는 대규모의 위험요인들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성장과 위험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분단체제아래서 진행된 압축적 성장 과정은 서구가 경험하고 있는 위험에 더해 새로운 유형의 ‘위험’의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지니고 있다. 한국사회는 그 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으나, 동시에 대형재난의 상시적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대형재난은 단순히 대형 건축물이나 다리와 같은 구조물의 붕괴에 그치지 않으며, 유무형의 다양한 형태로 일상적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로

³² 앤서니기든스 저, 한상진·박찬욱 역, 『제3의 길』 (서울: 생각의나무, 2001).

³³ 김영호, “올리히 베크 위험사회,” 박길성·조한범 외, 『현대사회의 구조와 변동』 (서울: 사회비평사, 1996), p. 129.

확대 해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수의 인명이 살상되는 대형구조물사고뿐만 아니라 지역주의와 획일주의, 배타적 대립구조 등은 한국 사회의 정상적인 시민사회의 발전에 치명적이고도 상시적 위험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심각한 문제는 남한사회의 경우 근대화의 한계가 분단이라는 요소에 의해서 보다 극단화되었다는 데 있다. 근대화의 불완전성과 아울러 이에 대한 냉전체제의 영향은 남한사회의 근대화를 이중적인 의미에서 제약했다. 남한사회는 근대화의 불완전성에서 기인한 문제와 아울러 분단과 냉전으로부터 비롯된 문제들을 동시에 지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구의 선진자본주의 국가와 달리 과대 성장한 국가권력과 권위주의, 시민사회의 미발달, 민족주의에 대한 과도한 신뢰, 다양성의 불용과 획일주의, 그리고 관용정신의 미발달 등이 그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 사회에 공히 존재하는 강한 민족주의적 정서 역시 분단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한국사회의 분단상태의 근대화는 이중적인 의미의 성찰을 요구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분단상태의 근대화의 한계에 대한 스스로의 자기진단과 성찰적 노력을 통한 해소책의 제시, 그리고 이에 기반 한 통일기반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성찰적 통일론’으로 개념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성찰적 통일론의 기본인식은 분단된 남북 양자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통일논의를 남북한 사회의 내적인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찰적 통일론의 관점에서 통일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장은 양 체제의 이질성을 줄여나가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 양 체제의 내적인 비정상성을 주목하며,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논리구조

를 내재하고 있다. 사회주의 근대화 프로젝트 자체가 실패했다는 점에서 북한은 스스로의 성찰적 노력을 경주할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북한체제의 내구성에 관한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는 한 북한은 체제의 생존의 경계선에서 점진적 해체의 여정을 걸어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성찰적 통일을 위한 노력의 주체는 남한일 수밖에 없다. 이는 남한사회 스스로가 분단체제하의 근대화의 비정상성을 회복하는 내적노력을 통해 통일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남북양자관계에 적용시켜 궁극적으로 통일사회를 실현해 나가는 주체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찰적 통일론은 현 단계 한국사회의 불완전성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이 없는 통일논의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현 시점에서 한국사회에 필요한 것은 기존 근대화경험의 한계를 직시하고 성찰적 노력을 통해 이를 해소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은 성공한 체제가 실패한 체제를 수렴하는 방식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남한은 변화를 위한 주체적인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제로서 전망을 가지지 못한 북한과 동일시 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의 실패가 남한이 절반의 성공에 안주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될 수 없다. 남한 역시 왜곡된 근대화를 정상화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으며, 분단으로 인한 ‘내 안의 장애’를 극복해야만 한다. 분단체제하 근대화의 비정상성은 다양한 차원에서 통일을 위한 노력들을 저해하게 된다. 전형적인 예로, 근대화과정에서 형성된 남한사회내의 권위주의문화와, 획일주의, 이념적 지형의 기형성, 그리고 배타적 갈등구조는 남북관계 변화를 받아들이는 완충지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내

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통일을 위한 노력은 남북양자간의 문제 이기에 앞서 양자관계변화를 수용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변화시킬 주체적 역량을 필요로 하며, 이는 분단체제에서 왜곡된 한국사회의 정상화와 관련이 있다.

완전하지 못한 상태의 장애를 지니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북한을 산술적으로 더하는 방식의 통일은 새로운 갈등의 소지를 지닐 뿐만 아니라, 근대화를 완성시킬 수 있는 기회의 박탈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낳을 뿐이다. 남북통일은 왜곡된 근대화의 정상화과정으로서 해석되어야 하며, 따라서 ‘성찰적 통일’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완전한 의미로서 통일의 시제는 과거로의 회귀도 아니며, 현재도 아니다. 그것은 미래 어느 시점이 되어야 하며, 우리 스스로의 정상화노력을 포함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완성되는 현재진행형의 시제를 갖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냉전문화를 해소하지 못하고 갈등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상을 목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통일을 위한 노력은 내적 차원, 즉 성찰적 통일의 노력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사회 근대화 자체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성찰적 반성을 통해 스스로의 자기완성을 지향하는 보다 근본적 차원의 고민이 전제되지 않은 통일노력의 전망은 밝지 않다. 분단은 남한사회 내에 치유되기 어려운 냉전문화라는 장애를 가져왔으며, 이 장애의 원인을 북한이나 미국으로 돌리는 방법은 그다지 생산적이지 못하다. 우리 스스로는 분단의 피해자 이자 동시에 가해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스스로의 장애를 치유하는 각고의 노력을 통해 통일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추진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는 통일논의의 근본적 인식전환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든스가 제시하는 ‘대화민주주의’(Dialogic democracies)는 성찰적 통일론에 있어서 실천적 합의를 지니고 있다. 대화민주주의는 동의의 획득이 목적이라기보다는 대화자체를 통해서 공적신뢰와 공존의 가능성 마련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통일논의를 둘러싼 한국사회의 분열과 갈등의 치유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서로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을 봉쇄한 채 이념적 대립의 강도를 증폭시키고 있는 현 한국사회의 정치·사회적 지형에 있어서 대화의 창구를 열어가는 노력 자체가, 보혁 양진영 스스로의 극단화를 방지하고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지형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찰적 통일의 관점을 토대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프로젝트들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3. 냉전문화의 해체

분단구조는 이에 상응하는 내적 문화를 형성한다. 남한사회의 냉전 문화는 분단으로 인한 비정상적 분단문화체계로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세계적인 냉전체제와 남북한간의 대립구조의 내적인 표현형태가 냉전문화라 할 수 있다. 남북한간의 극단적 대립구도의 단초는 수많은 인명이 살상된 한국전쟁이라 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남북한은 상시적 전쟁위험에 놓여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냉전문화는 ‘전쟁문화’(war culture)³⁴와 관련을 맺고 있다. 전쟁문화는 그 반 개

³⁴ 전쟁문화는 19세기에서 20세기에 이르는 시기 중 1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전쟁사례를 연구한 J. 바스케스가 제시한 개념이다. J. Vasque, *The War Puzzle* (Cambridge: CPU Cambridge Stud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1993); 냉전시대에 주목받은 제로섬 논리는 전쟁문화와 관계가 있다. 제로섬은

념이라 할 수 있는 평화문화의 형성을 저해해 왔으며, 전쟁의 상시적 위협에 놓인 남북한에서 평화문화의 단초가 형성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냉전문화는 반공과 레드컴플렉스의 형태로 재생산되어왔으며, 탈냉전기라 할 수 있는 현재에도 보혁 갈등, 혹은 남남갈등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냉전문화가 남북한간의 분단과 대립이라는 장기적인 형성과정을 거쳤으며, 따라서 그 영향 또한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냉전문화의 해소를 위한 내적인 노력은 통일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남남갈등의 소지는 커지고 있으며, 사회가 이념적으로 양극화하는 현상은 냉전문화의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 진전에 대응하여 남한사회의 대내적 인프라가 구축되기 보다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적, 비타협적 구도로 사회가 재편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는 냉전문화가 상존하는 상태에서의 통일을 위한 국민적 합의기반구축은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냉전문화는 극단적 이념대립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갈등을 잉태하며, 상대방에 대한 전적인 배타성을 전제로 하는 전쟁문화의 요소들을 내재한다. 냉전문화에 대한 반 개념이라 할 수 있는 평화문화는 근본적으로 상호공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냉전문화의 해소는 분열 및 갈등과 사회적 배타성을 해소하는 성찰적 노력을 통해

‘적’을 비합법적·비논리적 존재로 인지시켜, 상대방과의 협상이나 그 어떠한 중재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을 만든다. 따라서 대립을 심화시키고 통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제로섬은 전쟁문화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쟁문화의 극복은 새로운 평화문화의 형성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민, 『한국사회 평화문화 형성방안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0), pp. 14-16.

그 가능성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성찰적 노력은 한국사회 내에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며, 상호공존하는 토양을 만드는 노력과 관계가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톨레랑스의 문화’에서 시사점을 얻을 필요가 있다.³⁵ ‘지탱한다’ 혹은 ‘감수한다’라는 뜻의 라틴어 ‘tolerare’에서 유래한 톨레랑스(tolerance)는 16세기 초에 등장한 개념으로, 구교와 신교사이에서 발생한 종교 대립의 역사적 과정에서 그 의미를 지니기 시작했다.³⁶ 서구에서 톨레랑스의 개념이 정착된 것은 계몽주의 시대의 일이며, 이후 그 의미를 확장하여 현대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톨레랑스의 현대적 의미는 타인의 신념이나 사고, 행위가 나와 다를 때 나의 주장을 여타의 수단을 동원하여 강제적으로 관철시키려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한국어로 ‘관용’으로 번역되며, 관용의 사전적 의미는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이다.³⁷ 톨레랑스와 반대되는 개념인 앵톨레랑스(intolerance)는 타인에게 나의 신념이나 행위를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요하는 방식을 가리키며, 따라서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개념으로 풀이된다.

³⁵ 헨드릭 빌렘 반 룬 저, 김희숙·정보라 역, 『톨레랑스』 (서울: 길, 2000); 사시에 필리프 저, 홍세화 역, 『왜 톨레랑스인가?』 (서울: 상형문자, 2001).

³⁶ 따라서 비국교도들(침례파, 감리파 등의 프로테스탄트 교파의 신도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줄 목적으로 1689년에 영국의회가 제정한 법률인 관용법(Toleration Act)과 로마카톨릭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제한적이거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기 위해 신성로마제국황제 요제프 2세가 1781년에 공포한 법률인 관용령(Toleranzpatent) 등이 톨레랑스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

³⁷ 남영신 엮음, 『국어사전』 (서울: 성안당, 1997), p. 217. 유교적 전통과 가부장적 위계구조가 보편화되어있던 동양사회의 ‘관용’의 개념과 서구 계몽주의사상과 자유주의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톨레랑스는 그 의미가 완전히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동양의 관용은 자비, 혹은 사면, 아량과 의미연관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나와 타인간의 관계가 수평적이지 못하다는 뉘앙스를 지닌다. 그러나 서구 자유주의사조 속에서 발전된 톨레랑스는 나와 타인간의 수평적 관계를 전제로 한 상호존중의 의미를 더 크게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60여 년간 유지된 분단과 냉전적 상황은 좌우를 막론하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배제와 강요를 일상생활의 방식으로 정착시켜왔으며,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획일주의적 사고를 일반화시켜왔다. 남북관계 변화와 통일논의 자체가 이념적 차이를 기본으로 하는 배타적 대립구도에 의해 표류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톨레랑스의 문화, 즉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의 문화는 의미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톨레랑스 문화의 정착을 통해 한국사회내의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타파하고, 다양성이 용인되는 공존의 장으로서 사회를 가꾸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서구적 개념인 톨레랑스는 한국적 상황에 맞게 재해석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의미의 한국적 맥락을 발굴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범사회적 차원에서 ‘톨레랑스 코리아’(가칭) 운동의 전개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남한사회내의 성찰적 노력을 통한 스스로의 화해운동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스스로의 성찰과 아울러 상대를 관용하는 의미를 내포하는 ‘톨레랑스 코리아’(가칭) 운동은 남북관계발전과 병행하여 스스로 냉전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라는 인식 속에서, 냉전문화의 청산을 위한 범사회적 합의와 아울러 실천의지의 확산을 의미한다. 강요와 배제가 지배하는 냉전적 사회구조의 장기간 지속으로 남한사회는 이념적 다양성과 문화적 다양성이 요구되는 탈냉전적 시대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이슈마다 첨예한 대립이 재생산되는 구조는 강요와 배제라는 냉전문화 논리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강요와 배제보다는 차이가 인정되는 ‘공존의 문화’를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운동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지도층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앞장설 필요가 있으며, 정치권과 정부 역시 이를 위한 지원체제를 구

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냉전문화의 해체와 정상문화로의 회귀는 국민적 합의기반 구축을 위한 전제로서 해석되어야 한다. 보혁간의 차이와 편가르기가 아니라 보혁간의 정상적인 공존관계의 형성을 지향해야 한다. 정상적인 선진 사회에는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공존할 수 있는 시민적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따라서 냉전문화의 해체방식 역시 흑백논리차원의 청산방식이 아닌 공존의 논리 속에서 강구되어야 한다.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전환에 대한 무조건적 부정이나, 기존 대북정책의 방향성이 무조건적으로 옳다는 전제 속에서 비판적 평가를 수구적 발상으로 치부하는 태도 역시 공존의 장을 통해 해소되어야 한다.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남남갈등의 소지는 커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는 한 대북정책의 추진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에 수반되는 사회문화적 충격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게 된다. 특히 남북관계 발전과 냉전구조 및 냉전문화가 상충되는 현상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인바, 이에 대한 적극적 해소책이 필요하다. 국가보안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과 함께 대내적 냉전구조 및 냉전문화 청산을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금기영역이었던 다양한 냉전의 유제들에 대해 공론화와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 시 나타날 사회적 갈등 및 남남갈등을 중화시키는 사전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포괄적 의미에서의 통일교육’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문제를 둘러싼 보수, 진보간의 ‘합의를 위한 의사소통구조’를 구현하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이를 가능케 하는 사회적 지형과 사회적 인내의 형성을 위한 기초적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보수와 진보세력간

의 대립적 대화 단절의 상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는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는 공간이며, 두 세력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문제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대화와 합의가 가능한 ‘열린 공간’을 제도화하여 갈등을 중화하고, 합의기반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교육은 이와 같은 열린 공간의 형성을 뒷받침하는 기초 작업으로서 해석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추진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³⁸

냉전문화의 해체가 일방적 청산의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부정적 측면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간의 냉전 구조는 한국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영향을 미쳤으며, 따라서 냉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불분명한 상황을 형성했다. 남한사회의 보수와 진보진영은 각자 스스로를 냉전문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상당부분 오히려 스스로를 문제 해결의 배타적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분단은 한반도의 전구성원에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서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민족’이란 종교에 버금가는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일제의 강점과 이에 이은 분단체제의 형성은 ‘민족’이라는 개념이 한국사회와 문화의 핵심적 가치이자 거부할 수 없는 숭고한 가치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역사적 조건이었다. 특히 분단구조에 의해 통일이 민족적 과제로 설정됨에 따라서, 민족주의는 한국사회의 모든 진영에서 수용해야 할 가치로 생존해왔다. 이는 보수와 진보세력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되는 것으로, 양진영 모두 민족주의적 성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³⁸ 조한범, “남북한 사회문화통합을 위한 제언,” 『통일과 사회·문화통합』, 홈볼트 대학 Hans Meyer 총장 초청 국제심포지엄 발표논문 (2003.9.18), pp. 33-34.

그러나 역사적 경험이 말해주고 있듯이 민족주의는 극단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항상 시민사회의 경계성을 필요로 한다. 이미 인류는 2차세계대전의 나찌즘과 군국주의, 그리고 최근 유고슬라비아에서 극단적 민족주의의 부정적 가능성을 목도했다. 따라서 서구의 시민사회에서 ‘민족적’(national)이라는 표현은 긍정적인 의미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서독이 분단이전 시행한 정치교육과정에서 ‘통일’이나, ‘민족’을 강조한 교육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의 자기완결성을 추구하는 서독의 노력은 결국 독일통일의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민족 우선 논리에 빠질 경우 스스로의 내적인 냉전문화를 발견하고 시민사회의 자기완성이라는 노력을 경주하는 데 소홀할 수 있다는 성찰적 자기인식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보수와 진보세력 양자는 모두 자기존재에 대한 일정한 근거들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지형을 바탕으로 한국사회는 보수와 진보라는 양진영을 형성하고 있으며, 냉전문화는 이와 같은 양진영을 ‘숙주’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보수진영의 경우 장기간 남한 문화의 중심에 서있던 반공과 친미를, 진보진영은 이에 대한 반문화 성격으로 반미, 자주를 중심논리로 설정하고 있다. 보수진영은 진보진영을 친북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진보진영은 보수진영을 수구세력으로 비난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의 대립구도는 제기되는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상이한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핵 및 대북지원과 직접적 통일·북한문제외에도 이라크파병, 주한·미군재배치, 보안법폐지추진, 그리고 과거사청산 등 주요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보수와 진보세력의 비타협적 대립구도가 재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냉전문화의 해체는 성찰적 방법론을 필요로 한다. 상대방에 대한

불인정이나 일방적 청산의 시도는 상대진영의 단결을 도와줄 뿐이다. 따라서 냉전문화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을 유도하는 ‘전 사회적 성찰’을 통한 냉전문화의 해소라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복합적인 과정을 맺고 살아가는 공동의 생활공간이다. 그리고 사회의 내부에는 그것을 계급 혹은 계층이라고 부르는 사회집단과 서로 다른 이념체계들이 존재한다. 이들간의 이익관계는 상호 대립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타협적일 수도 있다. 사회의 근대화 혹은 선진성의 척도는 차별적인 사회집단들의 존재유무가 아니라 이들간의 사회적인 불평등의 정도, 사회적인 이동성, 그리고 다양한 집단들간의 타협과 사회적인 합의가 가능한가에 달려있다. 미성숙 된 사회일수록 기득권층의 힘은 비정상적으로 크고, 반대로 대다수의 소외집단은 권력과 재부, 사회적인 의사결정과정으로부터 소외되는 정도가 크다.

냉전문화 해소의 궁극적 목적은 분단으로 인한 모순과 불합리성들을 개선하는 것이며, 공동의 생활의 장인 사회의 상태를 보다 바람직하게 만드는 것이다. 냉전문화 해소방법의 선택과 과정 그리고 결과는 사회의 전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바로 이점에서 냉전문화 해소의 목표와 방법은 사회구성원들의 공통의 합의에 기초해야하는 당위성을 지닌다. 기득권세력의 불합리한 구질서 온존시도나, 소수의 전위세력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시행되는 냉전문화 해소시도는 사회발전논리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또한 대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의 의사를 소외시킨 채 진행된다는 점에서 양자 모두 위험성을 지니며, 그 자체로서 냉전문화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한국사회의 냉전문화 해소노력은 단기적인 청산작업을 넘어서 성장지상주의의 길을 걸어온 한국자본주의의 축적과정이 야기한 본질적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심층적 논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냉전문화의 해소는 이념적 문제를 넘어 건강한 시민사회의 형성과 민주주의의

완성, 복지국가건설이라는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인식에 기반 한 냉전문화 해소노력은 철저한 자기반성과 성찰 속에서 가능한 일이다. 러시아의 지성인 튄트체프가 말한 것처럼 “사회나 개인에게 있어서 모든 진보의 첫 번째 조건은 자기인식”³⁹이기 때문이다.

4. 합의구조의 형성

남북관계 개선의 전반적 과정은 남한 내의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합의정도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대북정책 추진기반의 강화는 남북관계 개선과정에 있어 핵심적이며, 근본적 의미를 지닌다. 주지하다시피 냉전문화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전되는 남북관계 개선과 아울러 비판적인 여론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정당정치에서 증폭, 재현되는 순환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남북관계는 정쟁의 소지로 활용되는 빈도가 높으며, 결과적으로 대북정책의 추진력을 약화시켜 왔다. 현재와 같은 민족문제 정쟁화의 재생산 구조는 해소되어야 하며, 그 대신 생산적인 합의구조의 형성이 필요하다. 정당정치의 특성상 모든 문제에 대한 합의가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민족문제의 정쟁화의 소지를 줄이는 최소한의 합의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의 4대 추진원칙중의 하나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통해 대북화해협력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했던 국민적 합의기반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침을 마련했다.⁴⁰ 이는

³⁹ Ф.И. Тютчев. Письмо к П.А. Вяземскому. Пятница (1848), Стихотворения (Москва, 1935), p. 299.

⁴⁰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투명성과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은 무엇

남북관계 개선과정을 두고 나타났던 남한사회내부의 갈등적 요소를 국민참여를 통해 해소함으로써 대북정책의 안정적 추진기반을 마련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대북정책의 추진과 통일문제는 여야간의 첨예한 대립 구도 속에서 정쟁의 소지로 이용되는 경향이 과거에 비해 완화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미동맹의 새로운 관계설정 및 대미관계 등 다른 외교안보적 이슈가 제기될 때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가 중첩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국민의 정부시기에 비해 보다 복잡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원칙인 국민 참여를 통한 대북정책 추진의 국민적 합의기반 강화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과 같은 관련이슈들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인 차원의 상반된 반응을 야기 시킴으로써 대북정책의 추진력을 약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은 북한문제에 대해 근본으로 입장을 달리하는 여야간 배타적 대립구도와 관계가 있으며, 언론을 포함한 여론주도층 역시 이와 같은 대립구도 속에서 양분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입장차이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합의구조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대북정책의 추진력을 약화시키는 근본적 요인이라, 사회통합의 전반적 차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문제와 대북정책 추진구도 상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세계적 차원의 냉전구조가 해체된 현 시점에서 소위 ‘색깔론’의 단골 메

보다도 중요하다. 이는 정책추진에 대한 정당성과 추진력을 확보해 줄 뿐 아니라 대북협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준다. 나아가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투명성이 제고 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 『통일백서 2004』, p. 34.

뉴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연관된 다른 차원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특히 남한사회의 갈등적 정당정치구조와 관계가 있다. 야당은 근본적 불신을 토대로 선거를 통해 집권한 여당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데에도 인색했으며, 이는 결국 탄핵사태로까지 이어졌다. 여당은 장기간 지속되어온 과거 질서의 문제점을 조속히 타파해야 하는 개혁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으며, 이는 과거 질서를 토대로 한 야당에 대한 배타성으로 인식되었다. 이와 같은 갈등적 정당정치구조는 결국 장기간 지속된 냉전구조의 결과인 손쉬운 이념적 대립의 형태로 재생산되었으며, 북한에 대한 인식 및 대북정책의 추진과정 역시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국면이 조성되었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초기적 의도와 다르게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민적 합의기반 강화의 문제는 여전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통일문제를 둘러싼 대립적 갈등 구도의 해소는 정치권과 여론주도층, 시민사회 등 전반적 차원에서의 성찰적 노력에 의해서 해소될 수 있는 복합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를 푸는 해법은 대북정책의 추진과 통일문제에 대한 합의구조의 형성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북정책과 통일문제를 정치권차원의 정쟁구조 속에서 분리하는 신사협정의 체결이 필요하다. 민족문제의 정쟁화는 궁극적으로 여야 진영 모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차원에서도 합의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정당간 협의를 통해 대북정책의 국내정치 불이용 및 민족적 차원에서의 정책추진 원칙을 대 국민선언 형식으로 천명하고, 이를 국회 및 정치권 차원에서 구체화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대 국민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기구들을 설치, 운영하여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점은 무엇보다도 대북정책에 대한 정당간 신뢰성의 확보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 국민설득을 통한 국민적 합의기반 형성을 위해 개방적 대북 정책수립체계를 구축하고, 대북정책 추진과정의 공론화를 지향,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여론수렴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대 국민설득 체제로 활성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 및 전문가 집단에 대한 지지유도가 필요하며,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국민적 합의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집단을 설득⁴¹하는 한편 적극적인 대 국민홍보작업이 필요한바, 이를 통해 통일 과정에 대한 현실화된 인식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⁴²

민족문제에 대한 시민사회내의 자발적 합의구조형성 역시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사회의 다원성과 이해관계의 복잡성을 고려했을 경우, 이와 같은 합의구조는 민족문제에 대한 ‘최소주의적 합의’(minimalism of consensus)⁴³ 형식을 통해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직과 행동력을 갖춘 극단적 보수와 진보세력이 사

⁴¹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여론을 선도할 수 있는 소수의 집단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반대하지 않도록 하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반대진영의 경우라도 반대는 단순히 언론에 의한 비판에 국한되며, 집단시위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는 점이 중요하다. 박종철 외, 『평화번영정책의 이론적 기초와 과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3), pp. 250-251.

⁴² 조한범,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2), pp. 60-61.

⁴³ “최소한 좌·우 양극단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자. 성조기·인공기 불태우기, 한총련탱크시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중 북한 자극행위, 협박과 위협시위 등 자극적·반(半)폭력적 행위는 우리사회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것처럼 동맹국 미국과 화해협력의 파트너인 북한을 자극하거나 반대 견해를 밝힌 사람에 대한 모욕과 협박 등 극단행동은 퇴출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조민, “통일정책과 국민통합,” 통일연구원주최 협동연구학술회의 발표논문 (2003.9.26), p. 33

회운동의 중심에 설 경우, 대화와 타협보다는 극단적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는 악순환구조를 이루게 된다. 극단적 보수와 진보는 상대방에 대해 근본적으로 인정하려는 인식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공존을 모색할 자세를 견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보수와 진보가 비슷한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한국적 현실에서 일방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으며, 상호공존의 논리를 가지지 않는 한 선거나 제도를 통해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소모적 대립구조를 형성하게 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인 동시에 한국사회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가신인도에도 악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통일문제를 둘러싼 합의구조의 형성은 통일논의에서 이와 같은 배타적 양극단을 배제하고, 대화와 합의가 가능한 시민사회내의 ‘중간층’을 확대하는 일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보수와 진보세력의 내부에서 스스로 극단적 행위들을 배제하는 성찰적 노력이 필요하며, 극단적 세력들을 각 진영에서 고립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합의구조 형성을 위한 다양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기관의 설립목적이 국민적 합의기반 구축과 관련되어 있는 민화협과 민주평통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민화협과 민주평통은 ‘국민적 합의기반창출’과 통일을 위한 ‘내적인 인프라구축’이라는 새로운 과제의 해결에 있어 적극적 역할을 찾아야 한다. 민화협과 민주평통은 통일문제를 둘러싼 내적인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적 합의기반을 위한 적극적 대국민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통일문제를 둘러싼 보혁간의 대립적 갈등을 공존과 대화의 장으로 만들어 내야하는 과제에 대해 민화협과 민주평통이 중요한 ‘장’(field)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방적 통일정책 추진체계 및 통일문제의 공론화, 효율적인 대국민 홍보 등의 부분에 대해서도 이들의 역할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과 궁극적으로 통일을 수용할 수 있는 국내적 인프라의 구축에 있어서도 통일관련 여론주도층의 중요한 역할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5. 시민사회교육의 확대

확대된 의미로 사회문화적 통합을 전제할 경우 시민사회의 역할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사회문화적 통합은 현 남한 체제로 북한을 수렴하여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적 공동체의 형성을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 북한의 경우 체제상의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체제의 생존이 가능하지 않다. 남한의 경우 새로운 대안을 주도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자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체제의 기본적 생존문제에 직면한 북한과 다르다. 따라서 남북한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은 대안적 시민사회를 추구하는 포괄적인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선 경제적으로 산업민주주의와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구현하고, 남북한의 물질적 격차를 해소할 경제력을 구비해야 하며,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완성, 사회보장체제의 완비,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적 다원주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구현하는 시민사회차원의 노력들이 필요하다. 시민단체는 남한사회의 자기완성을 위한 노력들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분단은 남북한의 근대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따라서 시민사회의 정상적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통일을 위한 노력의 기본적 방향성 역시 이와 같은 입장에 기초해야 하며, 따라서 시민사회영역의 정상화와 성찰적 노력을 포함해야 한다. 분단상황은 남한사회의 근대화 전반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이는 냉전문화로 생활세계에서 재생산되어온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체노력이 없이 근대화의 정상성회복과 시민사회의 정상적 발전은 가능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통일을 위한 대내적 인프라의 구축은 보다 확대된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바로 이점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남한 근대화의 모순은 시민사회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해온 측면이 있다. 그동안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 따르지 못했던 남한사회의 시민사회는 통일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남한 시민사회의 정상화는 통일을 위한 기반조성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시민사회교육은 시장경제체제와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합리적이고 건전한 행위주체를 형성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도 사회주의의 전통주의적 특성에서 벗어나 시장체제의 근대성과 적응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교육의 강화는 장기적인 통일교육의 측면을 지니게 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대북정책과 관련된 특성을 지닌 현 통일교육의 기본골격에도 변화가 필요하며, 통일교육이 보다 거시적인 시민사회교육의 하부 구조로 자리매김 될 필요가 있다. 통일을 분단으로 인한 근대화의 왜곡을 극복하는 정상성의 회복과정으로 이해할 경우, 시민사회교육과 시민사회의 건전한 발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분단의 왜곡된 영향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노력이 없이 국민적 합의기

반의 강화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독일의 대 시민 정치교육체계는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 민주주의 시민교육이 체계적으로 시행된 것은 세계 제 2차 대전 이후였으나, 이는 독일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승전국가들인 연합군은 독일이 다시 나찌즘과 같은 민족사회주의로 회귀하는 것을 막을 방법으로 민주주의 시민교육을 고안해냈다. 타율적으로 시행된 이 정책은 역설적으로 현 시점에서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실상 2차세계대전 종전시점까지 독일은 제도화된 민주주의시민교육의 전통을 가지고 있지 못했으며, 이는 나찌즘이 독일을 지배하게 된 간접적 원인이기도 했다. 종전 후 미국의 주도하에 서독인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었으며, 이는 학교교육제도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독일 시민교육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평생교육체제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은 시민 교육을 평생교육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독일에서 학교 체계 밖에서 성인들을 위한 정치 교육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다. 본(Bonn)에 전국 정치 교육 센터(National Center of Political Education: Bundeszentrale politische Bildung)는 독일 내무부가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중립적인 정치성향을 천명하는 기관이다. 통독 이전까지 본 센터의 핵심적 임무는 전체주의를 포함하는 독일의 과거에 대한 고찰이었다. 이 센터이외에 독일의 16개 연방주마다 연방 주립 정치 교육 센터(Federal State Centers of Political Education)를 두고 있으며, 이 센터들은 각 지역의 문제를 중심으로 기능하고 있다.

시민대학(Volkshochschulen: VHS)도 중요한 성인대상의 정치교육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독일의 모든 도시들이 자체적인 시

민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시민교육에 있어서 이와 같은 시민 대학의 교과 과정이나 강의에 있어서 관련 정치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외에도 교회나 노조, 사용자단체 등과 같은 사회단체와 관련된 기관과 교육 센터들도 독립적인 정치교육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 단체들도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정치재단들 역시 독일 시민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독일 내에는 5개의 정치재단들이 있으며, 이들은 독일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성인들을 위한 정치교육을 시행해왔다. 사회민주당과 연계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riedrich Ebert Foundation)은 가장 오래된 재단으로 1925년도에 설립이 되었으며,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onrad Adenauer Foundation)은 1964년, 바바리아(Bavaria)의 기독교 사회주의 연맹(Christian Social Union: CSU)과 관련된 한스 자이텔 재단(Hanns Seidel Foundation)은 1967년, 진보적인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Friedrich Naumann Foundation)은 1958년에, 그리고 독일 녹색당(German Green Party)을 지지하는 하인리히 뵐 재단(Heinrich Bull Foundation)은 녹색당이 독일 의회 내 의석을 차지한 이후인 1988년에 설립되었다. 가장 최근에는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이 설립되었으며, 이 재단은 구동독 여당의 후신인 '민주 사회주의당'(PDS)의 노선을 따르는 재단이다. 이 정치재단들은 조직 및 재정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이념적으로는 특정 정당과 친화력을 보인다. 각 재단은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며, 액수는 그 재단과 연계된 정당의 의석과 비례한다. 이와 같은 정치재단의 운영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정치 재단이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공감대가 독일사회에 형성되어 있다.⁴⁴

⁴⁴ Ronald Meinardus, “시민 교육 증진 과정에서의 민주주의 운동 재단의 역할:

이와 같은 점에서 한국사회의 탈냉전적 시민사회의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교육의 강화를 위해 포괄적인 조치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적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으며, 시민교육의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단체에 의한 시민정치교육은 정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⁴⁵

한국사회의 민주화과정과 사회운동의 활성화는 NGO의 발전에 있어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한국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는 아직 발생적 단계에 있는 시민사회를 침식하고, 통제함으로써 지배세력의 자율성을 확장시키려 했지만, 동시에 시민사회와 민주화를 위한 저항세력을 배양했다는 양면적 속성을 가진다.⁴⁶ 한국사회의 권위주의적 지배체제에 대한 저항과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분기점은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이며, 시민운동에 기반 한 NGO가 급증한 것도 이 시점을 전후해서이다. 1987년 이전 사회운동은 권위주의적 정권에 대한 저항과 민주화라는 공동의 목표 때문에 민중운동과 시민운동, 급진노선과 온건노선사이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았다. 그러나 1987년을 계기로 점진적으로나마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운동사이의 분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이 점차 분리되기 시작했다.

독일의 사례,” 『민주 시민 교육과 민주주의』,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한국 시민 단체협의회·미국 전국 민주지원 재단 공동주최 세미나 발표논문 (1999.12.14~15).

⁴⁵ “낙천·낙선 운동이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정치 교육이 정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이 바로 특히 보수 세력들이 겁내는 정치 교육에 잠재되어 있는 정치적 폭발력이다. 30년 전 독일에서도 그랬고 오늘날의 한국에서도 그 영향력은 크게 다르지 않다.” Ronald Meinardus, “독일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정치교육의 도전,” 『권위주의 문화속의 교육과 시민운동』, 한독 교육학회 세미나 (2000.5.27).

⁴⁶ 한배호, “정치변동과 국가-시민사회의 긴장관계,”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서울: 한울, 1992), p. 75.

1987년 이후 초기에는 민중운동이 사회운동을 주도했으나, 점차 다양한 분야에서 NGO가 출현했다. 198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93년 「환경운동연합」, 1994년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등이 출범하면서 시민사회 및 신중간계층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시켰다. 대표적인 한국 NGO중의 하나인 「경실련」의 경우, 특정계급이나 계층의 이해관계를 초월, 사회적 공공성을 추구하는 비정치적 순수시민운동, 점진주의적 비폭력·평화·합법운동을 지향했다.⁴⁷ 전반적으로 1987년 이후 ‘문민정부’의 등장과 ‘국민의 정부’ 출범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사회운동과 NGO활동은 지속적인 발전과정을 겪어 왔다. 이와 같은 추세 속에서 통일논의에 대한 민간참여가 확대되고, 따라서 통일과 관련된 NGO의 활동도 활성화되고 있으며, 점차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의 NGO들은 냉전문화의 극복과 분단으로 인한 한국시민사회의 비정상성을 정상화하는 본격적 시민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그 역량 역시 아직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교육의 활성화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독일과 같은 형태의 포괄적 시민교육을 추구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시민단체는 그 대안으로서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대표성 있는 시민단체들의 시민교육프로그램을 확대, 강화하고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현재 상당수의 시민단체의 경우 시민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통한 시민교육체제의 활성화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시민단체를 활용한 시민교육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과 아울러 프로그램 및 교재, 경우에

⁴⁷ 성경룡·김호성,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방안연구』 (서울: 정무장관실, 1997), pp. 18-19.

따라 강의시설 제공 등 종합적 지원체제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특정 대학을 지정, 평생교육형태로 성인대상 시민교육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의 시설과 인력을 기본 베이스로 성인대상 시민교육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대학 내 관련학과와의 연계성을 꾀할 수 있으며, 대학의 발전에도 긍정적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 지역의 국립대학을 성인대상 시민교육의 거점으로 활성화하고, 사학의 경우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시민교육체제는 공급자위주가 아닌 수요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각 지역의 기존 체제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차원의 문화센터 혹은 각 지역의 문화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재정과 아울러 시민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문화원이 이를 자체의 성인교육프로그램으로 시행하는 방안으로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시민교육을 관장하고,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중립적 지원센터로 ‘시민정치교육지원센터’(가칭)를 중앙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 시민사회 정상화를 위한 시민교육의 중심센터로서 적정한 예산과 인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독립적인 운영⁴⁸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⁴⁸ 성인대상 시민정치교육에 있어 독립성은 핵심적 중요성을 지닌다.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내무부나 하부 국가 기관에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이 실제설립과 관련된 제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다원주의의 원칙이 준수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Ronald Meinardus, “독일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정치교육의 도전,” 『권위주의 문화속의 교육과 시민운동』, 한독 교육학회 세미나 (2000.5.27).

6. 탈 냉전형 통일교육지원체제의 구축

냉전문화의 해소는 확대된 의미의 통일교육을 통해 그 가능성이 모색될 수 있는바, 냉전문화의 해체와 정상문화로의 회귀는 통일교육의 기본적인 방향성으로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보혁간의 배타성의 강화가 아닌 공존을 지향해야 하며, 다양한 차이가 용인되는 이념적 스펙트럼의 형성을 지향해야 한다.

세계적 차원의 냉전구조의 해체는 한국사회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제도와 문화의 관성은 이와 같은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냉전적 패러다임 속에서 기원을 형성하고 있는 통일교육 분야에서도 새로운 변화와 과거의 관성간의 마찰이 나타나고 있다. 현 통일교육체제는 남북관계의 개선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골격이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냉전체제하의 통일교육은 남북통합을 지향하는 시민교육의 성격을 지향하기 보다는 국민윤리차원의 이념교육의 특성을 지녔다. 통일교육 차원의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은 반공 및 안보교육이라는 국가적 캠페인의 하부구조를 이루었으며, 따라서 구체적인 자율적 프로그램이 마련될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통일교육은 국가안보라는 상위체계를 위한 하부구조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었으며, 따라서 안보교육체제의 일부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직접적인 통일교육은 안보교육과 소수 선발인원에 대한 방북교육 시스템으로 그 의미가 제한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통일교육체제는 냉전의 해체와 남북화해시대의 도래에 따라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다. 안보교육체제의 관성과 함께 통합되지 않은 학교교육 및 취약한 국민교육체제, 교육전문가의 절대부족 등의 문제

점이 그것이며, 이는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교육수요의 급증상황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기반 및 통일역량의 현실화라는 차원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종합적 재검토 및 지원체계의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노력이 필요한 분야는 비단 학교교육과 시민사회교육의 영역뿐만 아니라 언론, 문화 등 냉전문화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포괄적인 분야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우선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통일교육지원을 현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상황적 조건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학교통일교육 지원시스템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교사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방향성의 제시와 이를 토대로 한 교재개발,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통일전문교육 실시 등 보다 체계화된 통일교육지원시스템의 정비 등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안보교육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현장교육도 점차 통일을 대비하는 통합형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포괄적인 의미의 시민 통일교육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 관련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통일교육을 지원하고 통일교육을 위한 종합시스템을 중심으로 활용하는 것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 통일교육원을 직접교육기관에서 기능을 확대·발전시켜 지원센터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시민교육의 활성화차원에서 각 지역에 통일교육지원센터 등을 설립, 통일교육을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통일정책대학원의 설립 등 통일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통일수요의 증가에 대비하는 사전대비체제의 강화라는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또한 여성과 청소년 등 통일교육의 소외계층에 대한 통일정책 참여

를 유도하는 적극적 통일교육이 필요하다.⁴⁹ 통일교육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여성의 경우 대체로 통일문제 인식에 있어서 남성보다 보수적이고 낮은 관심도를 나타내지만, 이는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통일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점에 기인한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통일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여성계층의 특성을 감안한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종교단체, 학부모단체, 여성단체, 지역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 여성대상 교육프로그램 등을 효과적으로 연계한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전업주부들을 위한 여성들의 사이버 통일교육의 활성화와 여성 통일전문가양성 교육프로그램의 마련도 필요하다.

최근의 남북관계 개선추세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지지도는 전반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통일의식의 현실화과정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미래의 주역으로 청소년의 통일의식 약화는 통일기반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의 높은 인터넷매체활용도를 고려한 통일교육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청소년전용 포털사이트에 통일코너 등 간접적 교육효과를 꾀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 관련 단체의 교육프로그램에 통일교육프로그램을 결합,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 참여 유도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학교통일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적극적 정책이 필요한바, 주입식 학교통일교육체계를 개선,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수요자중심의 통일교육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⁴⁹ 조한범 외, 『월드컵에서 나타난 국민통합 효과의 계승 활용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3), pp. 86-88.

결론

V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통일은 한국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 성공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거의 동일한 시점에 분단된 한국과 독일의 차이는 한 쪽은 통일에 성공하고, 한 쪽은 아직도 분단 상태에 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서독의 경우 전후 재건과정은 시민사회의 정상성을 회복하는 과정과 맞물려 진행되었으며, 따라서 많은 성찰적 노력이 경주되었다. 서독의 성찰적 노력은 분단체제의 비정상성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자기방어기제였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서독이 동독을 흡수할 수 있는 기초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남한의 경우 한국전쟁과 냉전체제의 극단적 대립구도 하에서 자기성찰적 기회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차이를 지니고 있다.

남북관계의 변화와 아울러 과거와 달리 통일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과거 남북간의 대립이 첨예하게 진행되던 때, 통일문제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는 압도적으로 통일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현재의 여론조사는 이와는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그것은 과거보다 통일에 대한 지지도가 더 낮게 나

타난다는 점이다. 남북관계가 과거보다 진전되고 있고, 따라서 통일도 과거보다 가시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와 같은 결과는 다소 의아스럽게 평가될 수도 있다. 이를 통일열기의 약화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통일에 대해 사람들이 구체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상 통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나타났던 통일에 대한 일방적인 열망은 현실적으로 큰 의미를 지닐 수 없는 것들이었다. 이제 통일이 가시화되면서 사람들은 통일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실제적으로 통일의 과정과 결과를 고민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은 통일열기의 약화가 아니라 통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여러 이견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에서 출발하고, 현 정부의 평화변영정책에서 계승되고 있는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전환의 기본방향은 옳았으며, 세계적 냉전구조의 해체라는 역사적 변화와 기아에 직면한 북한을 앞에 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 성과도 남북관계의 대립의 역사에 비추어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문제를 둘러싼 남한사회내의 갈등구조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도 동시에 부각되었다. 따라서 대북화해협력정책과 이를 계승한 평화변영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비판에 직면해 왔으며, 이는 정책의 추진력을 약화시켜왔다. 이는 집권층이 소수정권이라는 한계뿐만 아니라 대북정책의 정당성 및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내적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점에 기인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민족문제를 둘러싼 남한사회내의 갈등구조 해소와 국민적 합의기반 구축에 정책

적 우선순위를 두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제도적 통일을 넘어 남북
한간의 실질적 통합을 의미하는 민족공동체의 실현을 위해 남북 양
자적 관점뿐만 아니라 보혁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는 남한사회내부의
냉전문화와 근대화과정의 비정상성을 동시에 극복해야 함을 의미하
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성찰적 통일’이라는 새로운 개념화로 귀착될
수 있을 것이다. 성찰적 통일은 남북관계의 양자적 문제에 주목하는
것에 앞서, 분단으로 인한 내적인 비정상성을 주목하고, 이를 해소하
는 것을 지향함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찰적 통일
의 관점은 통일은 성공한 체제에 의한 실패한 체제의 수렴이 아니며,
분단이 남북한에 공히 왜곡된 근대화를 강요해왔다는 점에 주목한다.
남한은 변화를 위한 주체적인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제로
서 전망을 가지지 못한 북한과 근본적으로 다르나, 북한의 실패가 ‘절
반의 성공’인 남한의 근대화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될 수는 없다. 남한
역시 분단체제에서 진행된 근대화를 비정상성을 해소해야 한다.

성찰적 통일의 관점을 적용할 경우, 우선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
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성찰적 통일의 관점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을 재해석할 경우 화해협력기의 과제는 단순한 남북관계 진전에만
국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양 체제간에 내재하는 이질성을
해소할 수 있는 체제내적인 문제들의 해소가 주요 정책과제가 되어
야 함을 의미한다. 성찰적 통일론의 기본인식은 분단된 남북 양자관
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통일논의를 남북한 사회의 내적인 차원
으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찰적 통일론의 관점에서 통
일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장은 양 체제의 이질성을 줄여나가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 양 체제의 내적인 비

정상성을 주목하며,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논리구조를 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찰적 통일인식은 통일을 위한 주체적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남한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될 필요가 있다.

성찰적 통일은 냉전문화의 해체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으며, 이는 공존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 냉전문화의 해소는 이념적 문제를 넘어 건강한 시민사회의 형성이라는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인식에 기반한 냉전문화해소노력은 철저한 자기반성과 성찰 속에서 가능한 일이다. 이는 민족문제에 대한 시민사회내의 자발적 합의구조형성과 무관하지 않다. 민주주의 사회의 다원성과 이해관계의 복잡성을 고려했을 경우, 이와 같은 합의구조는 민족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형식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합의는 각 행위자의 행위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통일문제를 둘러싼 극단적 대립구조를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성찰적 통일인식을 실천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대책은 시민사회교육의 활성화이다. 이는 통일이 분단된 남북한 간의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분단에 의해 스스로 비정상성을 잉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시민교육의 차원에서 해소하는 것을 지향한다.

아울러 ‘포괄적 의미에서의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사회는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는 공간이며, 두 세력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문제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대화와 합의가 가능한 ‘열린 공간’을 제도화하여 갈등을 중화하고, 합의기반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교육은 이와 같은 열린 공간의 형성을 뒷받침하는 기초 작업으로서 해석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추진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통일교육은 시민 사회교육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며, 공급자 위주가 아닌 소비자 위주의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구의 절대다수이면서도 통일정책의 참여과정에 소외된 여성·청소년에 대해서도 효율적 통일교육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문제는 이념, 세대, 지역간의 갈등구조가 중첩된 복합적 문제로 심도 있는 국민통합의 계기가 필요한 바,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험에서 나타나듯이 통일의 과정은 복합적이고도 지난한 과정이다. 최소한의 국민적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의 대북정책의 추진은 국론의 분열을 수반하는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다. 월드컵에서 나타났던 긍정적 희망은 정당한 계기가 주어질 경우 지역갈등, 세대갈등, 이념갈등을 넘어서 국민통합이 가능하다는 잠재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국민통합의 긍정적 측면을 통일을 위한 노력으로 현실화 시키는 실천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같은 노력은 분단으로 인해 저해되었던 한국근대화의 정상성 회복이라는 포괄적 틀 속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시민사회의 건강성 회복이라는 추진력을 지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배제와 강요라는 냉전문화를 극복하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시민사회의 정상문화의 정착은 통일을 위한 국민적 합의기반 구축이 핵심적 전제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남영신 엮음. 『국어사전』. 서울: 성안당, 1997.
- 박종철·조한범 외. 『월드컵에서 나타난 국민통합효과의 계승·활용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3.
- 박종철 외. 『평화변영정책의 이론적 기초와 과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3.
- 사시에 필리프 저, 홍세화 역. 『왜 톨레랑스인가?』. 서울: 상형문자, 2001.
- 앤서니 기든스·올리히 벡 외, 임현진 외 역. 『성찰적 근대화』. 서울: 한울, 1998.
- 앤서니 기든스 저, 한상진·박찬욱 역. 『제3의 길』. 서울: 생각의 나무, 2001.
- 윤덕희·김규륜. 『한민족 공동체방안 연구: 사회·문화·경제 교류협력 중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 윤덕희·김도태.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 조민. 『한국사회 평화문화 형성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0.
- 조한범·김성철 외. 『비정부기구를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0.
- 조한범·박종철 외. 『월드컵에서 나타난 국민통합 효과의 계승 활용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3.
- 조한범.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2.
- 최현호. 『남북 한 민족통합론』. 서울: 형설출판사, 2003.

- 통일부. 『2004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04.
- _____. 『통일방안에 대한 이해』. 서울: 통일부, 2002.5
<<http://www.unikorea.go.kr/>>.
- _____. 『평화번영정책해설자료』. 서울: 통일부, 2004.
- 통일연구원. 『남북한 ‘실질적 통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민족공동체형성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2.
- 헨드릭 빌렘 반 룬 저, 김희숙 정보라 역. 『플레랑스』. 서울: 길, 2000.
-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1983;
- 윤형숙 역.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서울: 나남, 1991.
- David Mitrany. *A Working Peace System*. Chicago: Quadrangle Books, 1966.
- Ф.И. Тютчев. Письмо к П.А. Вяземскому. Пятница (1848), Стихотворения. Москва, 1935.
- J. Vasque. *The War Puzzle*. Cambridge: CPU Cambridge Stud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1993.

2. 논문

- 김영호. “올리히 베크: 위협사회.” 박길성·조한범 외. 『현대사회의 구조와 변동』. 서울: 사회비평사, 1996.
- 이우영. “사회문화공동체의 개념.” 남북한 ‘실질적 통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민족공동체형성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2.
- 조민. “통일정책과 국민통합.” 통일연구원주최 협동연구학술회의 발표논문 (2003.9.26).
- 조한범. “남북한 사회문화통합을 위한 제언.” 『통일과 사회·문화통합』. 홈볼트 대학 Hans Meyer 총장 초청 국제심포지엄 발표논문 (2003.9.18).

한배호. “정치변동과 국가-시민사회의 긴장관계.” 한국사회학회 · 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서울: 한울, 1992.
Ronald Meinardus. “독일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정치교육의 도전.” 『권위주의 문화속의 교육과 시민운동』. 한독 교육학회 세미나 (2000.5.27).

_____. “시민 교육 증진 과정에서의 민주주의 운동 재단의 역할: 독일의 사례.” 『민주 시민 교육과 민주주의』.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 한국 시민 단체협의회 · 미국 전국 민주 지원 재단 공동주최 세미나 발표논문 (1999.12.14~15).

3. 기타

『연합뉴스』. 2003년 8월 8일.

『조선일보』. 2003년 8월 31일.

_____. 2004년 1월 12일.

_____. 2004년 10월 5일.

『한겨레신문』. 2004년 10월 4일.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2-01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전성훈	저	8,000원
2002-02	남북 환경·에너지협력 활성화 전략 연구	손기웅	저	8,500원
2002-03	미국의 MD체제 추진 실태와 국제사회의 반응	이현경 외	공저	9,000원
2002-04	북한의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비교연구	서재진	저	8,500원
2002-05	북한사회의 상징체계 연구	이우영	저	5,500원
2002-06	북한인권과 유엔인권레짐	최의철	저	6,000원
2002-07	김정일 정권의 외교 전략	박영규	저	4,000원
2002-08	북한의 대남 정책 특징	전현준	저	4,000원
2002-09	김정일 현지지도의 특성	이교덕	저	4,000원
2002-10	김정일총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2-11	“불량국가” 대응 전략	박형중	저	4,500원
2002-12	파키스탄-인도-북의 核政策	정영태	저	4,500원
2002-13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와 종교실태	김병로	저	6,000원
2002-14	9.11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4,000원
2002-15	북한의 국가위험도 측정모델 개발연구	김규륜	저	3,000원
2002-16	남북한 관계의 제도적 발전 : 이론과 실제	김학성	저	5,500원
2002-17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한국의 대응	홍관희	저	5,000원
2002-18	북한 협동농장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2-19	북한경제의 변화 “이론과 정책”	오승렬	저	4,500원
2002-20	북한 농업의 개발전략과 남북한 농업협력	최수영	저	4,500원
2002-21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군사적 조치의 이행방안	박종철	저	4,000원
2002-22	북한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진로	김학성 외	공저	8,500원
2002-23	남북한 및 미국의 3자 관계와 평화공존	박영호	저	5,000원
2002-24	북한의 핵개발계획 인정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저	4,500원
2002-25	화해협력정책과 남북한 미래상 연구	조민	저	4,500원
2002-26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연구	조한범	저	3,500원
2002-27	새로운 남북협력모델의 모색	임강택	저	5,000원
2002-29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이론적 모델)	박영호	저	4,500원
2002-30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 (점진적 시나리오)	조한범 외	공저	6,000원
2002-32	미국의 대·반테러 세계전략과 대북전략	이현경	저	6,000원
2002-33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와 추이	김영춘	저	4,500원

2002-34	21세기 한국의 발전구상과 대북전략	배정호	저	5,000원
2002-35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과 中國	최춘흠	저	3,500원
2002-36	통일독일의 적극적 외교정책과 한반도	여인곤	저	7,000원
2002-37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반도	김국신	저	4,000원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5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녀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송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곤 외	공저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현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영호 외	공저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함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3-16	통일예측모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공저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운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 ~ 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2	서재진·최의철·김병로 외	공저	8,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2</i>	서재진·최의철·이우영 외	공저	9,500원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최의철·이우영 외	공저	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i>	서재진·최의철·이우영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최의철·이우영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최의철·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2002~2003	6,000원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학술회의총서

2002-01	한반도 평화정착의 현황과 전망	4,500원
2002-02	북한 체제의 현주소	7,000원
2002-03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6,500원
2002-04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5,500원
2002-05	한반도 평화정착과 국제협력	6,500원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번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1권 1호 (200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1권 2호 (200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1, No. 1 (2002)	8,5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1, No. 2 (200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1 (2003)	9,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2 (200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	-----------------------------	---------

협동연구총서

2002-01	남북한 '실질적통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7,500원
2002-02	남북한 실질적 통합을 위한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10,000원
2002-03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북투자 방안	김영운 외 공저 9,000원
2002-04	남북연합기 북한 지역에 시장제도 정착 방안	박형중 외 공저 6,000원
2002-05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 주변국 협력 유도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000원
2002-06	남북연합 하에서의 남북정치공동체 형성 방안	박영호 외 공저 6,000원
2002-07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허문영 외 공저 5,500원
2002-08	남북한 통합을 위한 종교교류·협력의 제도화 방안	김병로 외 공저 7,500원
2002-09	남북한 직업교육훈련체제 통합 및 운영방안 연구	강일규 외 공저 8,500원
2002-10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행정통합의 과제	양현모 외 공저 7,000원
2002-11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의 교육통합 방안 연구	윤종혁 외 공저 6,000원

2002-12	남북한 법통합 및 재산권문제 해결방안 연구	조은석 외	공저	10,000원
2002-13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방안 연구	길은배 외	공저	9,000원
2002-14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여성정책방안	김제인 외	공저	10,000원
2002-15	실질적 통합대비 남북한 농업기술 교류협력 공동 추진 계획	신동완 외	공저	10,000원
2002-16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의 남북 문화예술 분야의 통합방안	김동규 외	공저	8,000원
2002-17	2002년 협동연구 요약집			10,000원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2-01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이현경
2002-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회의 결과분석	최진욱, 임강택
2002-03	미국의 북한인권문제 관련 동향분석	서재진, 김수암
2002-04	한반도 현안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입장	최춘흠
2002-05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 조치가 주민생활 변화에 미칠 영향	서재진
2002-06	후진타오시대 중국의 대내외정책 전망	신상진
2003-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	신상진
2003-02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임강택

2003-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임순희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이현경, 박영호
2003-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배정호
2003-06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박형중, 정영태
2003-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분석	박형중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노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근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운,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I)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전회 결과분석	전병근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므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므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